



자유경제원 e-지식 15-33

주류 경제학의 한계: 오스트리언 경제학의 함의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영용(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외

자유주의 경제철학: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주류경제학과 오스트리아 학파

자유주의 경제철학: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오스트리아학파와 주류경제학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차례>

- I. 문제의 제기
- II. 인식론: 진화적 인식론 vs 구성주의 인식론
- III. 시장이론적 귀결: 자생적 질서 vs 조직
- IV. 법이론적 귀결: 법 vs. 입법
- V. 자유주의 청사진 vs 주류경제학
- VI. 맺는 말

I. 문제의 제기

한국에서 주류경제학의 역사는 오래다. 그 경제학 발전과정은 홍기현 교수가 지적하듯이 ‘미국경제학의 한국화’이고 미국경제학은 신고전파미시와 거시경제학 수리계량을 필수로 여기는 경제학이다(홍기현 2005: 201).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한국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경제학이다. 경제학의 역사에서나 가끔 다루던 경제학이다. 케인스주의가 힘을 잃던 1980년대 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고 1989년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한국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 등 많은 오스트리아학파 관련 문헌들이 번역·출간되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지식은 오스트리아학파가 그 원천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학파핵심은 인간지식의 한계,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 규칙을 따르는 행동이다. 자생적질서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른다. 자생적 질서란 계획되지 않은 질서를 말한다. 이런 질서는 “인간행동의 결과이지만 인간계획의 산물이 아닌” 사회구조이다. 대표적인 예는 언어, 관행, 법, 도덕규칙, 화폐, 시장 등이다.¹⁾

주류경제학은 수요공급의 틀을 중심으로 수리 통계를 이용해서 일반균형모델 효율적인 자원배분 모형을 만든다. 일반균형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른다. 그 핵심은 극대화, 일반균형 그리고 자원배분이다.²⁾

오스트리아학파와 관련된 문헌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학파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시장과 법에 대한 철학적 토론도 풍요롭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 자유, 법치, 정의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러나 그런 가치들이 시장질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주류경제학은 그들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의 흔적이 없다.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도 없다. 기껏해야 시장을 자원배분을 위한 기계로,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등, 경제자유, 법, 시장을 가볍게 보는 게 균형패러다임이다.

두 패러다임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근본적인 이유를 각 패러다임이 전제한 인식론 때문이라

1) 자생적 질서와 대비되는 것이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입법 등이다. 이들은 특정한 집단목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계획된’ 질서, 즉 ‘조직(organization)’이다.

2) 주류경제학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피구, 새뮤얼슨, 애로우, 드브뢰, 스티글리츠 리처드 포스너 등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후생경제학과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 게리 베커, 로날드 코스 등의 시카고학파이다 이들 가운데 시카고버전이 후생경제학과 다른 점은 현실세계는 일반균형모델과 유사하고 효율적이기에 국가간섭은 불필요하다는 믿음이다. 시장실패가 있지만 이를 치유하는데 따르는 ‘정부실패’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고 본다. 인식론은 방법론 시장 법 윤리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제II장에서 두 패러다임이 기초한 인식론을 설명할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전제한 것은 인간지식의 객관성과 완전성이다. 인간이성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전통이다.

인간지식은 주관적이고 그 대부분은 초의식적이기 때문에 인간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진화적 합리주의’를 전제한 것이 자생적질서 패러다임이다. 그 같은 인식론이 두 학파의 방법론에 미친 영향, 즉 인식론의 방법론적 귀결을 설명할 것이다.

제III장과 제IV장에서는 인식론이 시장질서와 법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시장과 법현상은 인간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체계이고 이런 체계의 존재 때문에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인식이다. 그러나 일반균형론은 시장을 폐쇄적 기계적 단순계로 여기면서 자원배분을 위한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비용-편익 분석을 기초로 하여 법 현상을 다루고 있다. 주류경제학에서 법은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제V장에서는 자생적 질서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자유, 법치, 정의, 제한된 정부의 유서 깊은 가치들을 다룰 것이다. 이들 가치에 대하여 주류경제학의 인식론이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증주의라는 방법론의 오류 때문에 주류경제학은 그런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배제해버렸다.

마지막 제VI장에서는 주류경제학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II. 인식론: 진화적 인식론 vs 구성주의 인식론

경제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식론이다. 인식론에서 다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Radnitzky, 1987: 115).

(1)인간들이 타인들과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 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가?

(2)인지를 통해 형성되는 지식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오류가능하고 또 얼마나 타인들이나 물리적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인식론적 문제를 주류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파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1. 진화적 합리주의 vs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균형모델을 보자.

<표준적인 간단한 균형모델>

(1)관찰하는 경제학자에게 기업들의 비용·수입곡선이 주어져 있고 알려져 있다.
 (2)관찰하는 경제학자에게 소비자들의 선호가 주어져 있고 알려져 있다
 (3)관찰하는 경제학자에게 입수 가능한 자원이 주어져 있고 알려져 있다
 주어진 알려진 것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는 효용을,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경제학자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가격을 계산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모델을 구성한다.

균형모델에서 시장세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지식은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이 완전하다. 그 지식은 인지하는 주체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뜻이다.

지식이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는 세상에서는 경제문제는 최적화이다. 그 해법은 정신활동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자동적이다. 의미 있는 선택이 없다. 실망이나 놀라움이나 오류도 없다. 발견이나 학습도 불필요하다.

그런 접근법은 데카르트 흄스 등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구성주의적 합리주

의'이다.(Hayek, 1973: 9)

주류경제학의 접근법은 이기심과 극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시장과 기업에서 최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강조는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그것이 시장과 기업 개인들의 최적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간섭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의 강조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데에도 미흡하다. 예를 들면 공유의 비극, 사회주의의 붕괴가 이기심과 인센티브 문제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 이타심의 세계에서는 그런 비극도 붕괴도 그리고 정치실패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를 이끌었던 하이에크에게 행동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근원적인 것은 인간이성의 한계이다. 이기적이든 이타적 인간이든 누구나 지식의 한계를 겪고 있다. 세상에 관한 인간지식은 부분적 주관적이고 오류가능하다.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는 인간조건이요 삶의 조건이다. 전지전능은 인간이 아니요 그런 세상은 인간세상이 아니다. 인간지식의 한계라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인식론적 입장은 흄 스미스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진화적 합리주의'이다.³⁾

2. 인간지식의 성격과 한계

왜 인간지식은 한계가 있는가? 이 문제가 잘 알려져 있듯이 하이에크의 정신 이론의 핵심주제이다(Hayek, 1952).⁴⁾ 주류경제학이 전제한 인식론적 전제와 대비시키면서 오스트리아학파를 설명할 것이다.

첫째로 주류경제학은 시장사람들이 주어지고 알려진 그대로(그래서 객관적으

3) 주류경제학도 지식의 결핍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식을 준거로 하여 지식결핍을 진단한다. '최적탐색규칙' '합리적 무지'도 그런 진단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의 무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모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아는가의 문제다.

4) 1952년에 발간한 저서 『감각적 질서: 이론심리학의 기초』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인식론을 개발했다(Hayek 1952/1976) 그는 또한 60년대 및 70년대에도 인식론을 다루었다. 이에 관한 중요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규칙, 인지 및 이해능력』 (Hayek, 1967:43~65) 과 그리고 『추상성의 우위』 (Hayek, 1978:35~49) 이런 논문과 저서를 통하여 하이에크는 독보적인 인식론을 개발하고 있다.

로) 세상을 인지하는 것처럼 기술한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은 세상에 관한 지식은 주어진 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각자가 가진 두뇌를 통한 해석의 결과이다. 그래서 지식은 주관적이다. ‘주관성’은 지식이란 인지하는 주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하여 객관적 위치에 있을 수 없다.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이 없이는 소비재, 수단, 목적이 무엇이고 비용편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대체재 보완재도 평가하는 주체가 없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객관적 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인지와 해석은 새로운 지식의 창조다. 창조적 인지를 통해서 물리적인 대상을 재화,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그 전환에 창조적 정신활동이 작동한다.

인간지식이 불완전한 두 번째 이유는 인지는 추상적이다. 두뇌는 현실의 복잡성을 축소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외부세계의 특정한 국면만을 인지할 뿐이다.

셋째로 인간정신은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분류를 위해서는 분류도구는 분류의 대상보다 더 복잡해야 한다. X는 X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간지식의 상당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초의식적 성격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들을 완전히 알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불가능 때문에 정신을 알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신이 스스로 설명하는 데에 따른 한계, 지식의 대부분은 말이나 통계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지식의 주관성, 복잡성을 축소하는 인지, 인지의 진화적 성격, 이 모든 것은 오스트리아학파가 데카르트 전통의 주류경제학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방법론적 귀결: 일원주의 vs.이원주의

인식론은 우선 경제학의 방법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류경제학은 경제학이 자연과학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학의 수리·계량화를 열광한다. 방법론적 일원주의이다.

주류경제학의 입장은 과학주의적(scientistic)이다. 콩트, 생 시몬, 시스몽디 등

프랑스계몽주의 전통의 경제·사회공학의 정신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방법론적 이원주의다. 인간정신은 물리화학적 신경작용의 결과라고 해도 물리적인 것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은 자연과학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다루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경제학의 자료는 경제주체들의 생각 견해 의도 비용 편익 등 정신적 주관적 성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학의 옳은 방법이 주관주의이다..

주관주의 vs. 객관주의

주관주의가 왜 중요한가? 몇 가지만을 들고자 한다.

(1)생산은 자연적 물리적 외적 사건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신적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문제도 자원의 희소성이 아니라 지식의 희소성으로 이해한다.

(2)주류경제학은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이지만 지식 기대 등은 객관적이라고 전제한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의 정신활동을 제거해버렸다. 정태적 주관주의일 뿐이다.(Kirzner 1992)⁵⁾

인간이란 수량적 물리적 대상, 수리방정식의 종속변수로 취급한다.(Ebeling. 2007: 91). 총합변수들의 함수관계에서 인간을 배제시키는 이유다. 실증주의는 인간을 자연과학에서 실험의 대상이 되는 생명 없는 물질처럼 취급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주의는 선호와 기대를 전부 포괄한다. 그것은 개인의 평가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은 주관적 기대와 해석, 즉 정신적 활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다. 역동적 주관주의이다(Lachmann, 1982: 37). 그런 주관주의만이 기업가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3) 주류경제학은 계량화가 가능한 지식 명시적 지식만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개인이 가진 지식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암묵적 또는 초의식적 지식이다.

5) 정태적 주관주의를 통해서 주류경제학은 노동가치론을 부활시켰다. 알프레드 마셜의 치명적인 역사적 과오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인과적 설명방법과는 전적으로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인식이다. 방법론적 이원주의는 그 학파경제학의 주된 전통이다.

주관주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오스트리아학파 내에서 일치된 견해는 없다. 미제스는 선험적 범주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선험과학을 주장한다. 그러나 라흐만은 미제스의 선험주의를 반대한다. 막스 베버의 '이해방법'을 제안한다. 흥미로운 건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입장이다. 미제스의 선험주의를 동조하지 않고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는다. 검증할 이론보다 현실이 더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막스 베버의 '이해방법'에 매우 우호적이다. 하이에크는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 경제학이 얼마나 예측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주목한다.

설명과 예측: 복잡계 vs 단순계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스스로 조직되는 복잡계이다. 주류경제학은 복잡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예측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 자부심으로 끝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그런 자부심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다면 사회를 얼마든지 조종·통제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복잡계의 구체적 예측과 설명을 위해서 학자가 상황에 관한 개인들의 구체적인 지식에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간지식의 상당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초의식적 성격 때문에 개인들의 그런 지식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의 복잡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주류경제학은 부분시장(챔벌린/ 로빈슨), 부분 산업(마셜)으로 시장을 분할하여 다룬다. 복잡계를 단순계로 환원하여 설명과 예측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복잡계에 대하여 의미가 없다, 복잡계를 단순계로 만들어서 얻은 이론을 복잡계의 설명과 예측에 이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구나 그런 이론

을 기초로 하는 공공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 단순계이론을 통해서 얻은 이론을 가지고 복잡계를 간접하고 규제할 경우 실패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에크는 복잡계를 다룰 때에는 구체적 설명·예측 대신에 패턴예측과 원리의 설명을 제안한다..(Hayek, 1989. 제II장). 사유재산이 보장되면 재화의 교환현상이 등장한다거나 ‘일반적’ 조건에서 ‘일반적’ 결과가 생겨난다는 형식으로 이론을 작성한다.

어떤 일반적 조건하에서 시장경제가 스스로 조정되고 스스로 통제되는가? 어떤 일반적 조건에서 혁신이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모두 패턴예측, 원리의 설명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구체적인 개별적 현상이나 개별적 현상에 관한 문제제기는 아니다. 경제학은 원리의 설명과 패턴예측을 기초로 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복잡계이론을 통한 공공정책은 시장과정의 구체적 결과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복잡계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진화이론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발생하는가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는 소극적 설명이 복잡계이론의 특성이다.

III. 시장이론적 귀결: 자생적 질서 vs. 조직질서

진화적 인식론과 구성주의적 인식론이 각각 시장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전제하는 주류경제학은 시장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직으로, 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은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질서로 이해한다.

1. 경제문제: 자원배분 vs 지식소통

주류경제학에서 균형모델은 소비자선호, 비용, 가용자원 등과 관련된 지식이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경제학자는 그런 지식을 기초로 하여 가격-수량구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작성한다. 경제문제가 자원배분문제다.

시장질서는 성격상 ‘자생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은 이와는 전혀 다른 질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만든 ‘조직(Organization)’처럼 취급한다..⁶⁾ 만든 사람은 경제학자이다.⁷⁾

균형조건에 필요한 일련의 가정들과 관련된 지식은 중앙의 계획당국이 균형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계획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일반 균형론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가능성을 옹호하는데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반균형 자체의 문제이다. 첫째로 시스템 유형의 문제다. 균형은 폐쇄된 기계적인 시스템이다. 그것은 단순계이다. 가역적 현상, ‘기계적 인과성’ ‘뉴턴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현실시장은 ‘내재적 인과성’을 가진 불가역적 진화적 시스템이다.⁸⁾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 그것은 창발적 복잡계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일반균형의 해석의 문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지식의 의미로 재해석한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간에 대하여 정확한 기대를 가진 상태이다. 그런 상태는 기껏해야 사회적 학습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다. 균형이론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한 학습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실시장에서 지식의 발견과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장과정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지식들은 주어진 게 아니다. 구조적 무지 때문에 그들은 시장과정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그런 지식을 학습하려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 시장과정에서 인간들이 상호작용

6) 경제학자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모든 목적들(후생함수)을 포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정한대로 수행하는 행동에서 행동조정이 생겨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Streit, 1995 32-33).

7)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치명적이다 <위로부터의 분석>이다 학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한다는 뜻이다. 원래 분석은 아래로부터의 분석이어야 한다.

8) 내재적 인과성이란 원인이 효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여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존재하여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된다.

주류경제학에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선호와 필요한 지식이 주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주의 철학자 유르겐 하버마스는 자본주의에는 인간들 사이에 소통이 없다고 비판한다.

자기 계발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호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소통행위임에도 소통부재가 자유 자본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소통부재의 자본주의 대신에 소통합리성에 충실한 숙고민주주의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Pennington, 2005)

시카고학과 자유주의 버전에 대한 하버마스의 소통부재 비판은 옳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버전은 소통을 중시한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조적 무지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극복방법은 시장에서 수많은 타인들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소통을 통해서 비로소 시장은 스스로 질서가 형성된다. 상호간 학습을 통해서 비로소 시장은 스스로 조직되는 복잡계가 된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시장이 어떻게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2. 자생적 질서와 소통체계

어떤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지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듯이 시장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스스로 세 가지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민경국 2007: 539).

- (1) 무엇이 개인들로 하여금 지식을 발견 축적하게 하는가?
- (2) 어떻게 개인들의 잘못된 지식의 이용이 통제되는가?
- (3) 어떻게 개인들의 주관적 지식이 사회적으로도 이용가능한가?

그런 문제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핵심 답변은 경쟁으로서의 발견절차(Hayek, 1968)이다. 경쟁은 지식습득과 학습을 촉진한다. 시장은 지식의 오남용을 처벌한다. 지식의 오류를 발견하고 제거하여 경제적 피해를 제한하는 것도 경쟁메커니즘이다.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이다. 구조적 무지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수많은 타인들과 소통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흥미롭게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 생각 의견 논거들을 소통한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지적하듯이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거대한 소통체계’이다(Hayek, 1961/1996: 57)

다양한 문제해결책들에 관한 지식, 그런 해결책들의 상대적 성과에 관한 지식, 사람들의 선호 생각 기대 등이 자생적으로 창출되어 타인들에게 전달 및 소통된다. 그런데 그 소통은 직접 대화와 설득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소통에서 언어를 이용한다.⁹⁾ 그러나 시장에서 언어적 소통은 전체 소통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소통은 비언어적(nonlinguistic) 소통이다(민경국, 2015). 이게 가격을 통한 소통이다. 시장경제만이 가질 수 있는 소통방법이다.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적 소통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언어적 방법은 글로 쓰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아는 사람들끼리 가능하다. 그런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비언어적 소통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의 소통이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대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초 의식적이다. 상황과 관련된 현장지식의 대부분은 그런 종류의 지식에 속한다. 그런 지식은 말과 글로 전달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는 표현할 수 있다.

9)에덤 스미스가 자신의 『국부론』에서 교환을 이성과 대화의 능력을 연결시키는데(Smith, 1776:13, Horwitz 2001:84) 이는 설득방법이다.

재주 아이디어 특정한 재화에 대한 호·불호 기업가정신 등에 내장된 지식이 그런 성격이다. 시장은 말이 아닌 행동을 중시하는 이유다 그런 지식들은 경제인들의 구·판매행위를 거쳐 가격구조에 반영된다. 따라서 가격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은 가격에 구현된 타인들의 의견 선호 생각 등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건 가격을 통한 비언어적 소통은 우리의 귀 눈으로는 물론 인지능력으로도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범세계적인 거시우주로 까지 확대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가격구조가 거대한 소통체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발견·소통과정 지식사용의 통제과정, 요컨대 자율적인 행동조정과 통제과정을 통해서 시장은 스스로 질서가 형성된다. 이제는 균형이 아니라 과정이다. 혼란스런 과정이 아니라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은 주류경제학의 균형이론이나 거시경제처럼 위로부터의 분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학파처럼 발생-인과적(genetic-causal) 방법(Cowan/Rizzo, 1996)을 이용할 경우에만이, 다시 말하면 ‘아래로부터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이야말로 교환이나 시장평가처럼 사회현상은 개인들의 행동들과 이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무의도적 결과의 분석 방법이다. 그런 분석의 초점이 예를 들면 가격결정이 아니라 가격형성, 특수목적을 위한 의도된 제도가 아니라 인간행동에 의한 무의도적인 제도들의 형성 즉 자생적 질서의 형성이다(Caldwell, 2004: 22).

IV. 법이론적 귀결: 법 VS. 입법

인간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안내하는 것은 행동규칙들이다. 행동규칙은 직업윤리 예의범절 약속이행, 소유의 존중, 동의를 통한 소유의 이전, 종교규칙 이웃의 재산·명예·인격존중. 등 다양하다.

어떻게 경제학이 그런 행동규칙을 이론적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주류경제학의

법 경제학을 대표하는 포스너(R. Posner)는 도덕, 법과 같은 제도의 문제를 비용-편익 분석(가격이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비용-편익 분석은 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법과 도덕, 제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자유와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간과 집단목적(객체)의 관계로 대체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자.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낮모르는 의사에게 몸을, 은행에게는 거금을 맡기는가, 어떻게 서로를 잘 모르면서도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의 행동에 의존하여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수행하고 달성한다. 거대한 사회에서 거의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과 거래관계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앞에서 설명한 가격이외에도 규칙을 지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키는 규칙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구조적 무지가 극복된 것이다.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규칙을 따르는가?

1. 규칙을 따르는 행동

왜 규칙을 따르는가?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구조적 무지를 극복하는 방식이다. 행동할 때마다 비용 편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를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행동규칙은 예측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행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금지된 행동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는 행동규칙들이 두텁게 쌓여있다. 그런 행동규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구한 역사적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다.

규칙 때문에 타인들을 상세히 모르면서도 그들의 행동에 관한 보다 정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행위는 일종의 소통행위이다. 가격구조와 똑같이 행동규칙들은 우리의 다양한 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체계다. 그래서 규칙을 따르는 행동은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응된 행동방식이다¹⁰⁾

인간들이 지키는 행동규칙은 반드시 글(성문화)이나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의식적일 필요도 없다.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규칙들 중 대부분 초 의식적이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행동규칙들을 지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완전히 아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어떤 행동규칙도 도덕도 법도 불필요하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서 우리가 지키는 행동규칙은 어떤 성격인가? 첫째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규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특정인이나 특정한 그룹을 지정하여 예외로 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로 행동규칙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없다. 그래서 탈 목적적이다. 개인들의 특정한 사정이나 특수한 시점 또는 특정한 장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의미에서 추상적이다.

추상적 성격의 행동규칙은 대부분 특정행동을 당연 금지하는 내용이다. 행동규칙은 예측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행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그런 성격의 행동규칙이 정의로운 행동규칙(rule of just conduct)이다(Hayek, 1967; 1976). 이쯤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와 인간의 관계이다 오스트리아학파에게 인간은 사회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들어난다.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원자적 인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좌파 측의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란 고립된 원자적 인간들의 세계라고 비판한다(Mulhall, S./ Swift, 1996).

10) 우리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무엇을 해서 안 되는가에 관한 지식에 기초한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진 행동을 피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적극적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주류경제학은 여기에서도 적극적 지식만을 중시한다.

주지해야 할 것은 그런 비판이 해당되는 것은 오스트리아학파가 아니라 주류 경제학이다.

인간은 규칙을 따르는 동물이라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덕, 전통, 관행과 관습 등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많은 행동규칙들이다. 인간은 사회제도의 산물이다. 지식이 분산되어 있고 암묵적인 세상에서는 사회질서를 위해서 인간들의 관계를 안내하고 의견을 소통하는 행동규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구조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기적이고 고립된 원자적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주류경제학은 하이에크가 지적하듯이 참된 개인주의가 아니다.

2. 정의로운 행동규칙: 법과 입법

입법자가 정한 것이면 무엇이든 법인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법인가?

오스트리아학파에게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만이 참된 법이다. 이런 법은 차별이 없고 탈 목적적 성격의 법이다. 그런 성격의 법이 사법(private law)과 사법사회를 구성한다. 사법사회의 경제적 측면이 시장질서이다. 그래서 법은 입법자나 주권자가 만든 명령과 다르다. 명령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 즉 입법이다. 입법은 시장을 특수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조직을 위한 공법과 같은 성격이다. 제정법 체제에서든 보통법 체제이든 사법을 구성하는 행동규칙들 대부분의 원천은 사회 속에는 일반인들이 지키는 행동규칙들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인위적으로 입법부가 정한 법에 비추어 볼 때 발견된 법들이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더 적합하다는 뜻이다(Rizzo, 1985). 사법으로 구성된 법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 명시적 지식의 한계, 타인들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경제계획은 물론이거니와 법을 만들 수 없다. 법질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은 계획경제의 계획 담당자가 시장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을 계획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Leoni, 1972: 18-19).

‘경제계산논쟁’의 결론은 어떤 입법자도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을 정할 수 없다는 인식의 특수한 사례이다. 법질서를 인위적으로 창조하려는 것은 언어를 창조하려는 것과 똑같이 무모하다.

3. 법과 주류경제학

주류경제학은 법과 입법의 구분이 없다. 오히려 법을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법에 대한 이런 인식이 법을 타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인스주의와 후생경제학이 그렇게 인식하는 전형적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리처드 포스너의 법인식이다. 법의 자생적 생성을 반대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을 기초로 하여 법 규칙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경국, 1997: 410~492).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법을 만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이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 관계는 정의(justice)의 문제이다. 주류경제학의 비용-편익분석은 법을 인간과 목적(객체)의 관계로 대체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의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 인간과 목적의 관계는 개별 경제, 민간조직 또는 정부조직과 같은 조직에서나 타당한 개념이다.

주류경제학은 법을 집단목표인 자원배분의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기초한 법은 법의 존엄성도 줄어든다. 그러나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는 집단목표가 없다. 개개인들의 목표만 있을 뿐이다.¹¹⁾ 그런데 자생적 질서에 적용할 행동규칙을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목적이 지배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는 시장에 대한 규제

11) 시장실패라는 개념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적합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에치코 가즈노리, 1997: 29).

와 통제다.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려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혼돈에서 유래한 것이다. 법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은 사법의 공법화를 초래한다. 더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비용편익 분석 자체도 문제시한다. 비용 편익 모두 주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비용이나 편익은 시장참여자들의 정신 속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용이나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고사하고 발견할 수도 없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도 암묵적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 규칙의 효과 분석 그 자체도 문제이다. 관련 법 규칙 하나만을 고립시켜 분석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그 법 규칙은 현행의 다른 법 규칙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 관습 등과 결합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합하여 등장할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새로이 도입할 법이 일반성 추상성을 갖춘 정의로운 행동규칙인가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의 사법질서의 원칙과 양립성 테스트를 한다.

V. 자유주의 가치 vs 주류경제학

자생적 질서의 개념에서 도출된 가치개념들이 자유사회의 청사진이다. 도출된 것은 자유, 법치 정의 제한된 정부이다. 주류경제학은 균형이론을 가지고는 그런 가치들을 전혀 다룰 수가 없다. 주류경제학에는 자유 정의 법치 개념이 없다. 그런 가치는 경제학의 대상 될 수 없다는 실증주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치들은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 자유가 미치는 효과, 법치의 위반으로 생겨나는 문제 등은 경험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가 자유주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가치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이론을 통해서다.

1. 자유

자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과학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의미이다.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생적 질서’는 사회과학의 존재이유를 말해준다. 자생적 질서의 바탕에는 자유가 깔려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부인하면 사회과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도가 신(神) 또는 특정인에 의한 계획의 산물이라면 신의 뜻 또는 계획한 사람의 심리를 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도덕적 차원은 자유는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평화 번영과 같은 다른 가치들의 조건이라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번영이다. 부의 증대의 결과로서 오는 문명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이다. 그런 번영은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번영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목표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을 알 수 없다.

자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대비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는 자유란 의미 없다 자유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의 존재이유도 없다. 발견절차로서의 경쟁도 불필요하다. 화폐도 불필요하다. 완전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물물교환으로 충분하다. 주류경제학의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한 화폐를 다루지 않는 이유다.¹²⁾

자유는 타인들의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사적영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적 영역의 핵심은 재산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할 자유이다. 계약의 자유와 집행이 중요한 이유다. 재산은 시장을 통해서나 부모의 상속을 통해서 습득된다. 한때 오스트리아학파는 현재의 소유를 주어진 것으로 여겼다.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

12) 케인스 경제학이든 시카고학파든 주류경제학은 미시 대신에 거시경제학에서 화폐를 다루는 것도 이상하다. 거시는 총합변수로 작성되는 거시경제학 자체도 문제다. 행동하는 인간을 배제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이 아니다. 그런 동거가 도대체 가능한가? 동거가 불안한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이석, ?).

다. 그런 도덕적 공백 때문에 롤스와 같은 사회주의자가 등장했다. 그런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노직은 자기소유(self-ownership)원칙(Nozick, 1974)을, 커즈너는 발견자 소유자 원칙(finders-keepers rule)을 개발했다.(Kirzner, 1989).

2. 법의 지배

흔히 법치를 법에 따른 통치 또는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 준법정신 등으로 이해한다. 법실증주의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이는 잘못이다. 오스트리아학파에게 자유사회의 이상으로서 법치는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다. 법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Hayek, 1960/1997 II: 19)..

그 속성은 일반성 추상성 탈 목적성 등 앞에서 설명한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과 같다. 법치란 정의로운 행동규칙이라는 도덕철학적 개념을 법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민경국, 2012).

그 같은 성격의 법으로 구성된 게 사법(private law)이다. 그리고 사법을 기초로 하는 게 자생적 질서이고 사법사회이다. 그런 자생적 질서로서 사법사회의 경제적 부분이 시장질서이다.

법치의 취지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의 자의적인 강제를 제한하는데 있다. 자유와 법치는 그래서 양립한다. 법치는 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법치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법치는 자유의 법적 구현이고 동시에 자유의 보호를 위한 장치이다. 법치는 사회의 역동적 진화를 허용하고 자생적 질서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법적 틀이다. 확장된 질서의 기반이 되는 법적 조건이다. 자생적 질서와 법치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명령이 없는 질서의 원리이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자생적 질서는 법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구조적 무지 때문에 두 개념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의 구조적 무지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생적 질서이다. 법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성격의 행동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는 그런 법치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법치의 타락을 불렀다. 법을 특정한 국가목적에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경제학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국가목적에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흥미롭게도 포스너는 자유사회를 위한 법으로서 좋은 법과 법치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와 법의 지배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Posner, 2003: 281). 그는 법치를 적법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런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같은 생각은 틀렸다. 법치는 자유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흄 스미 스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 보여주듯이 자유사회와 시장경제의 관계 속에서만 법치가 의미가 있다. 법치는 자유사회 시장경제와 연결된 것이다. 자유주의를 떠나서는 법치를 생각할 수 없다(민경국, 2009). 그런 유서 깊은 고귀한 법치개념이 한때는 나치즘도 법치를 사용했고 오늘날에는 사회주의자들 등 누구나 법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복지나 분배를 중시하거나 거시, 계량, 수리를 통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중시하는 주류경제학이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3. 정의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주의에서 정의는 공로(노력 능력), 욕구 또는 분배평등과 같은 ‘유형화된’(Nozick, 1972) 사회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실정법의 창조물이라는 법실증주의 주장도 아니다.

오스트리아학파에게 정의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정의의 원칙은 정의로운 행동규칙이다. 이는 개별적인 특수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칙들이다. 선호와 목표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탈목적적이다. 특정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느 한 법 규칙이 정의의 규칙인가를 테스트 할 경우에 일반성, 추상성, 확실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정의의 법 시스템과 양립하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기존의 법 시스템은 현행 사법질서에 담겨있는 원칙이다.

행동규칙은 개별적으로 고립하여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규칙과 조합되어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테스트는 성격상 소극적이다. 정의롭지 않은 행동규칙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정의의 테스트는 특수이익의 비중을 따지는 게 아니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정의롭다고 여기는 특정의 분배 상황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다. 법의 판단 기준으로서 이 같은 소극적 성격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칼 포퍼(K. Popper)의 과학 철학과 매우 유사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의 과학철학에서 자연의 법칙은 무엇이 발생하는가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그의 철학에서 이론의 테스트란 지속적인 반증 노력이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법은 정의의 법이 아니다 비례의 원칙을 중시하고 엄격책임원칙을 부정하는 것도 경제학도 자유와 재산을 절충적인 대가로 여긴다.¹³⁾

오스트리아학파 중에는 하이에크와는 달리 자연법을 대변하는 학자가 있다. 이성에 의해 보편적 도덕규범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 게 자연법사상이다 그런 도덕규범은 외적인 기준이다 어느 한 규칙이 객관적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그런 도덕규범을 찾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런 자연법사상은 선형적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등장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전복할 위험이 있다.

13) 석탄열차 불티로 농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누가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에서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서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든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피해당한 농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거래비용이 존재하여 권리의 할당을 효용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당한 농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이다. 엄격책임원칙을 부정하는 코스의 이론은 농민의 재산권과 도덕감을 무력화시킨다. 정부에 의한 권리의 믿을 만한 집행이 없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사회적 목표나 사회적 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코스 정리는 도덕적으로 가장 음험한 논 센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North, 2002: 85)

정의로우나, 정의롭지 않느냐는 행동과 관련해서만 의미 있는 문제이다. 시장경제의 분배결과를 놓고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시장에 분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보수는 그 어떤 계획의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무의도적인 결과이다. 분배하는 실체가 없음에도 시장경제의 분배결과를 분배정의로 평가하는 것은 의인화의 오류이다. 따라서 분배정의는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보수체계를 사회정의로 교체하는 것은 발전을 정지시킬 뿐이다. '분배'를 위해 자원을 분배하려는 구성주의적 노력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공로나 욕구를 결정하고 비교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로는 시장방법을 제외하고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공로의 결정은 불가피하게 자의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은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위반이다. 왜냐 하면 그들의 물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목표로 하는 분배정의는 법치는 물론 법치가 확보하려는 법 아래에서의 자유와도 화합할 수 없다.

4. 헌법을 통한 권력제한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주의 버전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이 헌법을 통한 권력제한이다. 국가권력을 제한할 필요성에서 헌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주의는 이타적이고 전지전능한 국가관의 탓으로 권력제한을 간과한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다른 점이다.

헌법규칙을 통해서 국가의 활동을 제한해야 권력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오스트리아학파나 공공선택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이론적 접근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공공선택론은 주류경제학처럼 정치가든 부의 생산자든 이기심과 극대화의 가정에 의존한다. 합리적으로 극대화하는 정치가들이 보편적 이익을 희생시켜서 특수이익에 영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이타적인 정치가들이

제한 없이 선의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왜 그것을 막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실제로 이타적이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이타적 정치가에 의존하는 주장을 비판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공공선택론 입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학파가 중시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다.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해도 국민민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타적 목적은 의미가 없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잘 아는 정치가라고 해도 자원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도, 법을 원하는 바대로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지적 자만을 막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지적 자만의 불가피한 결과는 이익단체의 폭정이나 전체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의식적인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의도로 경제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의 운명에 처해있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할 안내할 뿐이다. 진정한 정치질서는 국가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VI 맺는 말

주류경제학은 수리적 계량적 형식화로 경제학이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2의 물리학이 되었다. 경제학이 공학이 된 것이다 금융공학, 경제공학이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 말이다. 그런 경제학에서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매우 감성적이고 본능을 즐겁게 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주의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철학자 마이클 샌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다.

주류경제학은 자유에 대한 성찰도 없다. 정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없다. 오로지 도표와 수학기공식 수치의 조작뿐이다. 법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다.

주류경제학에는 법이란 목적을 가진 조직을 위한 법 즉 입법일 따름이다 정의 개념도 없다 기껏해야 법실증주의를 따라서 정의란 실정법의 창조물이라고 믿는다. 효율성 편익극대화는 정의 개념이 결코 아니다.

주류경제학을 대체할 경제학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다. 그 학파는 창시될 때부터 철학 법철학 국가철학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물리학적 사유는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

자생적 질서, 인간지식의 한계, 경쟁의 발견절차, 시장의 거대한 소통체계, 규칙을 따르는 행동 등 시장원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는 요소들도 그런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것이다.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도 변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시기에 오스트리아학파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적중했다. 폴 새뮤얼슨, 케네스 애로 등 주류경제학의 거성들이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얼마 전까지도 소련과 같은 명령경제도 자본주의처럼 마찰 없이 변명한다는 주장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자유 정의 법치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진지한 토론의 결과로 구성된 것이다. 유럽의 시민들이 겪었던 빈번한 폭정,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 등으로 자유와 정의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몸소 겪었던 곳에서 생겨난 학파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1920년대 고속 인플레이션,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의 등장 독일 나치즘, 1929년 대공황 복지국가의 등장과 같이 역사적으로 매우 큰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다져진 사상체계이다.

자생적질서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에게 그런 사건들은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지적 자만의 치명적 결과였다. 오늘날

저성장, 고실업 빈곤 위기도 정부의 지적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의 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계획하는 정부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불신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자생적 질서패러다임이다.

참고문헌

- 김균 이현창 편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 심포지움 논문집『한국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미제스 『인간행동』 I II II. 민경국 박종운 공역 지만지 2013
-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주류경제학과 질서경제학』 자유기업원 1997
- , 「법치주의, 자유 그리고 변영」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자유와 시장』 제1권 (2009)
- 자생적 질서, 법, 그리고 법치주의 제도와 경제 6(1) 2012
- 『하이에크, 자유의 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연구』.한울아카데미
(2007).
- 배진영, 인간중심 경제학원론 울곡 출판사 2013
- 에치코 가즈노리 경쟁과 독점 공병호 역 자유기업센터 1996
- 황수연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도서출판 리버티 2013
- 하이에크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문예출판사 1989
- 홍기현 한국에서의 경제학 발전과 과제, 김균 이현창 편 『한국경제학의 발달과 고려
대학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Buchanan, J. M. The Soul of Classical Liberalism, The Independent Review, v.
5 n.1 Summer 2000
- Caldwell, B. Hayek's Challenge Chicago 2004
- Coowan, R./ Rizzo, M. The Genetic-Causal Tradition and Modern Economic
Theory, In Kyklos 49 1996
- Ebeling, R. M Austrian Economic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Freedom
Freeman 2004
- Fuller, L. Morality of law New Haven 1969 법의 도덕 강구진 역
- Hayek F. A ,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Rule and Order, London. 1973.
- ,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2, Mirage of Social Justice 1976.
- ,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1961 자유의 헌법 I 자유경제원 /1996
- ,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한글판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박상수 역 자
유기업센터 1948/1996
- The Sensory Order: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the theoretical
Psychology. London. 1952 민경국 역 감각적 질서 자유기업원 2002
-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ondon. 1967.
-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제II장 참조, 문예출판사 1989,
- ,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 Ideas. London. 1978
- Horwitz, S. From Smith to Menger to Hayek, in *The Independent Review* VI n1 Summer 2001
- Kirzner, I. M. *Discovery, Capit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Oxford 1989
- Leoni B. *Freedom and Law* Los Angeles 1972 자유와 법 자유기업원
- Mulhall, S./ Swift, A *Liberals & Communitarians* 2.ed. 1996
- North, G, *Undermining Property Right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 16 no 4 2002
-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 Pennington, M. Hayekian Political Economy and the Limit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Political Studies* : 2003 vol. 51,
- Posner R, *Law Pragmatism and Democracy* 2003
- Rawls, J. 1971/99. *A Theory of Justice*, Oxford.
- Rizzo, M. The Genetic-Causal Tradition and Modern Economic Theory in *Kyklos* 49(3) 1996
- Soto, H. de *The Austrian School* Cheltenham 2008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민경국 교수님의 논문은 오스트리아학파와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의 차이를 인식론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학파와 주류경제학의 시장질서와 법현상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법과 정의, 질서 등 자유주의의 비전을 주류경제학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석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음.
- 주류경제학이 현실경제현상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에 의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서 신고전학파 혹은 합리적 기대학파의 주류경제학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대해 케인지안과 합리적 기대학파의 논쟁은 정부의 개입과 금융감독에 집중되고 있음.
- 케인지안인 Paul Krugman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합리적 기대학파가 정부규제를 반대해서 금융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므로 정부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의 John Cochrane 교수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이러한 금융위기가 주류경제학 즉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에 오류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과 경기변동론이 관심을 끌고 있음.
-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은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실증주의 방법론임. 경험주의적 범물리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론을 정립함. 이론이 경험적 통계자료에 의해 검증된 후 이를 통해서 예측하게 됨.

-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러한 방법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주류경제학의 경제이론이 잘못되었고 예측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Milton Friedman과도 차이가 있음.

-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실증주의 보다 선험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인간행동의 결과로서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인간행동은 자연과학과 달리 경험적 결과로 모형화 할수 없음. 이는 인간행동과 경험적 결과사이의 인과의 방향이 인간행동에서 경험적 결과로 가는 것이지 경험적 결과에서 인간행동으로 인과하지 않는다는 것임.

- 주류경제학이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행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임.

- 외부효과가 있을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류경제학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 학파는 재산권을 보장해서 외부경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정부의 개입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독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진입을 제한했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하였다는 원인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함.

- 화폐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지폐발행 독점을 비판하고 자유은행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금본위제도와 같은 상품화폐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경기변동도 정부의 시장금리에 대한 개입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경제학임.

- 이러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류경제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류경제학의 모든 이론의 핵심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주류경제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주류경제학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주류경제학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쉽지 않아보임. 역사적으로 경제학이 실제경제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경기침체 그리고 신흥시장국의 외환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혹은 대체할수 있는 주류경제학이 등장하기 못하고 있음.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과거 1930년대 세계대공황시기에는 고전학과 경제학이 산업혁명에 의한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했고 1973년 석유파동때에는 기존의 수요충격에 대안을 제시했던 신고전학과 케인즈 경제학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합리적기대학과 경제학이 새로운 주류경제학으로 등장했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경제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음. 일부에서는 이를 오스트리아 학파와 같이 방법론의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즉 경제학 발전초기 아담 스미스 시기에는 경제학은 역사, 정치,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나 한계 혁명 이후 물리학과 수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얻은 것은 노벨경제학상이고 잃은 것은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자조적인 비판이 있어왔음. 이러한 점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임.

-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주류경제학인 합리적기대학파가 주류경제학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있음. 또한 미국경제학이 세계경제학을 대표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음.

- 주류경제학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음.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변수들은 모두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는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 제도적 변수나 기타 정치적 변수들은 모형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합리적 기대학파의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서는 거시적 경제변수까지 제외시키고 있어 현실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최근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그리고 선거와 법적인 요인등 비경제적 요인을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데에 포함하는 방법론이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경제적 현상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하려는 방법론이 주를 이루고 있음.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요인을 포함하여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 끝에 James Buchanan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주류경제학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음.

- 특히 주류경제학은 미국경제학으로 제도와 개방도등의 경제여건이 다른 신흥시장국 경제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면 신흥시장국은 비교환성 통화 즉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장규모가 작아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환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데 교환성 통화 즉 국제통화를 가진 미국경제에 기초해서 외환보유고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신흥시장국은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

- 양적완화만 해도 일본은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어 양적완화시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나 한국과 같이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양적완화는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을 만들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시키지 못해 수출을 늘릴 수 없음.

- 각종제도를 외생변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과 경제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임금이 과도하게 높은 원인은 연금제도와 연관이 있음. 과거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던 시기에는 연금제도가 필요없었으나 현재와 같이 여건이 변화한 경우 연금제도가 미비하면 노동자들은 노후소득을 저축하기 위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함. 연금제도의 구축없이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낮추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일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과 같음.

- MIT대학의 에스모글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도에서 찾고 있으며 이익집단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주류경제학은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방법론을 검토하고 외생변수로 취급하던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을 내생화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경제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나라 경제여건을 감안한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민경국 교수, ‘자유주의 경제철학: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오스트리아학파와 주류경제학’에 대한 논평

홍기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 의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사상에 대해서 천착해 오신 민경국교수님의 글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류경제학에 비교한 특징을 잘 소개하고 있어서 상당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진화적 인식론과 자생적 질서로 시장과 제도를 설명하는 접근을 잘 설명하고, 고유한 가치로서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2. 약간의 다른 의견

오스트리아 학파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할 것은 없으나, 그와 비교된 신고전학파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서 신고전학파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화 시켜서 소개하여, 표현이 지나치지만 일종의 허수아비(straw-man)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느낌이 있다. 신고전학파 또는 주류경제학에도 다양한 흐름이 있으므로 어떻게 특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마다 다를 것이지만,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연역법을 주로 사용하되 가설검증을 위해서 통계적 방법을 채택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특성 위에서 다양한 보조가설이 사용되므로, 이 글에서 공격되고 있는 전형적인 이론체계에 비해서 연구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진화게임이론, 실험경제학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신고전학파와 친화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글에서 제시된 신고전학파는 너무 단순하게 묘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글 4페이지에 있는 표준적 균형모델은 통상 미시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1980년대 정도의 표준적 모형인 Arrow-Debreu 모형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모형에 따르면 (1) 기업들은 스스로 비용-수입곡선(기술 및 시장의 반응)을 알고 있으며, (2)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알고 있으며, (3) 자원이 유한하면 균형이 성립한다는

것이지, 이를 경제학자들이 모두 알 필요는 없다. 경제학자는 경제주체들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행동하면 전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할 뿐이다. 즉 이 글에서 소개된 모형의 묘사는 사회적 계획자(social planner)가 있을 때 계획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을 나타내고 있어서, 계산가능한 일반균형 모형과 같은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의 응용 분야의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과학발전과 오스트리아학파의 과제

위와 같은 사소한 해석 상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파력이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가 복잡한 현실을 적합하게 잘 설명하는 접근법인데 비해서 신고전학파가 현실을 단순하게 왜곡하여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접근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1930년대 이후 신고전학파가 많은 나라에서 득세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과학에는 핵심적 체계나 접근법 외에 많은 보조적 가설, 개념과 같은 보조적 발견장치(heuristic)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비판되고 있는 외부성,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보조적 개념은 단순한 이론체계를 적용시켜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들이다. 신고전학파는 접근법은 단순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보조적 장치들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이론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생적 질서, 규칙준수적 행동, 구조적 무지와 같은 몇 가지 중요 개념을 바탕으로 현실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려고 하는데 과문한 탓인지 시장과 화폐의 발생과 같은 몇 가지 사례 외에는 보조적 장치들이 많지 않아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교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논평자는 오스트리아학파에 관심을 가지고 학사과정 3학년 과목인 <경제학사>에서 많은 내용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능력 부족 때문인지 1회나 2회 이상 설명할 내용이 별로 많지 않다. 그것도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자인 Negishi가 한계수입-한계비용곡선을 이용하여 금본위제가 아닌 경우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정도가 전달될 수 있는 정도였다. Mankiw의 Principles of Economics에는 자의적이지만 “10가지 경제원리”라는 형태로 주류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비해서, 오스트리아학파 등이 말하는 규칙준수적 행동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주요한 행동규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핵심내용을 전달하는데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논평자는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과 그 이후 neo-Austrian 자본이론을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이 내용도 결국 신고전학파와 친화적인 Wicksell의 균형수리모형을 바탕으로 할 뿐이며 Hicks나 Faber의 자본이론은 복잡성에 비해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아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고전학파는 이론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계적 생산함수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해서 경제변동, 기술발전의 요인, 경제성장의 패턴, 소득분배 추이 등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4. 맺음말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대로 “세상은 복잡하고 인간의 인식은 짧다”. 그렇다면 편협한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려면 단순한 이론이 더 전파력을 가진다. 과학사가(科學史家) Thomas Kuhn은 과학의 채택기준으로서 consistency, accuracy, scope, fruitfulness, simplicity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사실에 부합할(accurate) 수도 연구범위(scope)를 넓게 가질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전가능성(fruitfulness)이나 단순성(simplicity)에 의존한 전달력이라는 면에서 치명적(fatal) 결함을 갖고 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점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니 인간의 인식이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신고전학파보다 기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신고전학파는 한 가지 물건의 가격이 움직이면 다른 물건의 가격도 움직인다는 사실이라도 전달하는데 성공한데 비해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세상은 복잡하고 인간 인지능력은 부족하다는 사실만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미시경제학:
완전경쟁시장, 가격이론,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안 경제학과 미시경제이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미시경제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시장, 경쟁, 자본과 자본가, 기업과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 등에 대한 개념 부재의 문제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이론에서는 사유재산이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어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한 도덕, 정의의 규칙, 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경제 질서와 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경쟁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설명도 없다. 또한 시간선호에 따른 이자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자본과 자본가에 대한 이론도 없다. 생산함수로 축약되는 기업 이론은 그 자체로서 암실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을 일으키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

미시경제이론은 대부분 변하지 않고 특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변한다. 이는 곧 경제 데이터는 매일매일 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제학이 우리가 현실에서 직관하는 현상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학문이라면 그 틀은 변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독점과 완전경쟁시장 이론을 비롯한 ‘시장구조론’은 변화의 과정(process)이 아니라 특정 상태(state, situation)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 결과 경쟁을 통해 알아내야 할 각종 정보, 즉 소비자 선호, 가격, 비용 조건 등을 이미 알려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분석틀로는 매일매일 당면한 경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제 주체들(소비자, 자본가, 기업가)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즉 경쟁, 자본가-기업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간 선호, 불확실성, 이윤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미시경제이론의 대부분이 최적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다. 동학(dynamics)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대부분 모든 정보가 주어져 있다는 가정 위에서 전개되므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은 논의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미시경제이론이 다루는 대부

분은 경제학이 아니라 형식 논리학에 가깝다. 각 경제주체가 실제로 미래의 경제 환경을 예측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직관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현실적이며 틀린 정책이 경제의 원활한 움직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그러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과정에 대한 숙고 없이,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것이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양 이론의 탐구 대상의 차이와 시장질서에 대해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경쟁, 제4절에서는 시간선호와 자본 및 자본가, 제5절에서는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 이윤 등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논의를 요약한다.

II. 경제의 운행 원리

1. 탐구 대상의 차이

경제주체들은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한다. 생산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수요, 비용, 그리고 기술 여건 등을 예측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소비자들 역시 자신의 주관적 선호와 불확실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에 의거하여 자신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즉 경제주체들의 일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러나 미시경제이론이 다루는 내용에 따르면 각 경제주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없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선호, 수요, 가격, 비용, 기술 등의 모든 여건이 이미 알려지거나 주어진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관적 판단에 기초를 둔 소비자, 자본가-기업가의 행동과 의사결정,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없다.

즉 경제주체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이 없으며 수학적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든 해를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미시경제이론에는 행동하는 인간이 없어, 경제학은 인간 행동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형식 논리학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 교육은 경제학적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수학적 해를 구하는 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다.

제3절의 경쟁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미시경제이론은 변화하는 과정이 아닌 특정 상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미시경제이론의 주된 내용은 모든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 비용최소화 등의 최적화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된다. 동학(dynamics)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개입되지만 주어진 문제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해답으로서의 시간 경로를 보일 뿐이다.

반면에 오스트리안 경제학에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상태’의 경제학이 아니라 ‘과정’의 경제학이다.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소비자, 자본가, 기업가는 물론 그들이 실제로 경제에서 행하는 기능과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2. 시장질서의 형성

미시경제이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 하에 이뤄지는 자원배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시장 형성을 둘러싼 제반 논의가 없다. 사유재산 제도가 사회 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기여하는 기능과 그러한 제도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의식적·무의식적 행동 법칙을 따름으로써 시장질서가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행동 법칙과 시장질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간다는 것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시장은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 칸트의 ‘정언명령’, 하이에크의 ‘정의로운 행위준칙’ 등은 모두 인간의 행동 법칙과 그에 따른 시장질서의 형성에 긴요한 것들이다.

물론 미시경제이론이 사유재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시장질서와 행동 규칙에 대한 논의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즉 인류가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형성된 보편적인 행동 법칙, 즉 관습, 도덕, 법 등을 준수했을 때 나온 시장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 부정의하다면 어떻게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당연히 행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을 규율하는 법(law)의 탄생과 일반성·추상성·확실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법의 속성에 대한 논의가 없어 ‘법치 개념(rule of law)’이 바르게 정립될 수 없으며, 입법(legislation)이 곧 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된다. 그 결과 그런 운행 질서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

특히 사유재산 제도가 없는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재를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재 가격의 부재에 따른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는 사실을 교육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개인의 자유는 물론, 정의와 평화가 확보된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설명도 없다.

III. 경쟁

1. 경쟁이란 무엇인가?

미시경제이론에 경쟁만큼 자주 등장하는 용어도 드물다. 그러나 경쟁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경쟁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참여자를 배제하려는 대항적 행위(rivalry or emulation)로 정의된다. 즉 경쟁이란 본질적으로 다른 참여자를 이기려는 대항적 행위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인 교환학적 경쟁(catallactic competition)은 다른 동물 세계에서의 생물학적 경쟁(biological competition)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한다.

생물학적 경쟁이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 자연이 제공하는 한정된 먹이를 둘러싼 다툼을 말한다. 동물의 세계에는 협동이나 교환이 없다. 따라서 생물학적 경쟁의 특징은 서로 간에 먹느냐 먹히느냐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싸움이며 패자는 폐기된다. 영합(零和)의 게임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난하며 흔히 사용하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

반면에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을 교환학적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교환을 하므로 인간 사회의 경쟁은 노동 분업을 통한 협동을 낳는다. 즉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은 자연이 제공한 먹이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닌 협동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늘려 전체의 몫을 늘림으로써 몫을 둘러싼 갈등을 조화로 해결한다. 양합(陽和)의 게임이다. 그 과정에서 패자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차차선의 위치로 이동한다. 이 점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징이다. 현실에서 냉엄하게 보이는 경쟁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협동하기 위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다. 결국 교환학적 경쟁의 최종 목적은 승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경쟁은 과정

아담 스미스(Smith)를 비롯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쟁을 시장과정(process)으로 파악했다. 시장과정이란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의 행동을 사회적 협동이라는 요구에 맞춰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완전경쟁은 꾸르노가 경쟁이 모두 끝난 후의 최종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었지만, 제본스(Jevons)나 에지워드(Edgeworth) 등에 의해 경쟁과 시장 구조가 결합되었으며, 이후 클라크(Clark)와 나이트(Knight) 등에 의해 정치화되었고, 이후 경쟁은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특정 상태로서의 완전경쟁을 비롯하여 경쟁을 시장구조와 결합한 것은 신고전학파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경쟁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은 ‘경쟁하다(to compete)’라는 동사적 의미여야 한다. 즉 경쟁 개념이 의미가 있으려면 ‘경쟁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되는 상업 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경쟁은 가격을 결정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하는 힘(force)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리학에서의 중력(gravity)과 같은 것으로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완전경쟁

완전경쟁은 물리학에서의 완전 진공(perfect vacuum)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완전경쟁은 더 이상 경쟁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즉 서로 경쟁하는 많은 기업들이 산업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경쟁한 결과,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태이다.¹⁴⁾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며, 다른 참가자들보다 더 좋은 방법의 행동을 통하여 더 이상 달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경쟁하다’를 뜻하는 동사적 의미의 경쟁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완전경쟁은 가정의 비현실성에 따른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 불가능성도 문제지만 ‘경쟁하다’를 뜻하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¹⁵⁾

하이에크는 경제학자들이 과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논의하면서 마치 경쟁의 본질과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믿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 기업가는 자기 상

14) 완전경쟁시장은 경쟁이 모두 끝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변화하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경쟁시장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은 경쟁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지적 구조물로서 기능할 수는 있다.

15) Salin(1996)은 동일한 재화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징지어지는 완전경쟁시장은 역설적이게도 통제 경제의 전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품이 어떤 가격에 얼마나 판매될 지와 필요한 생산요소를 어느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지를 점차 발견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선호와 개인이 보유한 지식 등이 모두 알려져 있다면 경쟁은 필요 없고 계산문제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완전경쟁 역시 경쟁 과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경향이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논의하므로 경쟁 행위의 범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경쟁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완전경쟁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각각 생산 방법과 수요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러한 지식은 경쟁 행위를 통해서 획득되기 때문에 경쟁 과정 없이 경쟁적 균형 상태에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요컨대, 모든 지식이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해버린다. 경제학이 형식 논리학이 아닌 사회 과학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미시경제이론에서 가정하는 ‘주어진’ 것들에 대한 탐구가 이뤄져야 한다. 즉 경쟁은 발견적 절차이며, 경쟁을 통한 발견적 절차에 의해 지식을 창출하고 집적하여 경제 활동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미시경제이론의 시장구조론에서 다루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도 ‘과정’이 아닌 특정 ‘상태’에서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완전경쟁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독점의 예를 들면, 방해받지 않은 시장에서 형성된 독점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한 결과 남은 단 하나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과 품질이 다른 모든 참여자들보다 우월하여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특정 시점과 공간 상에서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경쟁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기술 여건과 비용 조건 등이 다른 기업들보다 우월하여 시장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철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독점 기업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복지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체재가 널려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장구조론은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¹⁶⁾

특정한 시공간 상의 특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바로 시장구조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와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자(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되어

16) 대체재와 보완재 등을 판별하는 주체는 경제학자나 경제 관료가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일 뿐이다.

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특정 시공간 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공간의 울타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공간 상에서도 대체재는 널려 있기 때문에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시장 획정은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더 큰 정책적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현실의 시장을 실패한 시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경제 개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 개입으로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고칠 수는 없으며, 비효율은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해소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현실 시장은 실패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완전함과 비효율적인 것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현실 세상을 비교하는 것은 열반오류(nirvana error)다.

IV. 자본과 자본가

미시경제이론에서 자본은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생산함수에 K 로 표기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정의와 축적 과정,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자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즉 자본 이론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자율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자본재와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본이 축적되는 원리와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자.

1. 자본재와 자본

자본재(capital goods)는 오늘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소비재의 재고에 의해 획득되는데, 이는 두 가지의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자연적 생산요소인 토지(원자재 포함)와 노동에 시간이 더해져 만들어진 기계 및 중간재 형태를 띠거나, 더 길어진 생산 기간을 지탱해줄 수 있는 소비재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자본(capital)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한 자본재의 총 화폐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본은 항상 일정한 자본재의 형태로 존재하고, 특정 자원을 자본재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재로 사용할 것인지는 자본가-기업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으로 얻은 빵 1000개 중에서 100개를 소비하고 나머지 900개를 저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계 제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자. 물론 100개의 빵과 900개의 빵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내가 저축한 900개의 빵을 근로자를 고용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데 사용한다면 빵 900개는 자본재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자본가-기업가만 알 수 있다. 따

라서 자본은 자본가-기업가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본재로부터 자본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재의 객관적 교환 가치인 화폐 가격이 있어야 한다. 자본재의 화폐 가격이 있어야 화폐 평가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자본주의 경제에는 자본재와 자본이 있지만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사회에는 자본재는 있지만 자본은 없다. 자본 개념은 시장경제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이익을 얻고 손실을 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계산을 돕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자본재는 어떻게 획득되는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자원’과 ‘미래의 자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연적 자원의 소유자인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의복, 주택과 여가 활동을 위한 자원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원은 오늘 즉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원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근로자나 토지 소유자들은 각각 노동과 토지라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장 오늘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 미래에 완성되는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요소들이다. 이러한 자원을 우리는 미래의 자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누군가가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가진 노동과 토지 서비스라는 미래의 자원을 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재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곧 자본가다. 자본가는 자신의 시간선호에 따른 저축으로 현재의 자원을 제공하고 미래의 자원을 사서 생산에 투입한다. 그런 점에서 자본가는 시간 시장(time market)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즉 자본가는 시간의 매개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다른 시간 시장은 대부 시장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시간을 매개로 하여 자원을 대차하는 시장이다.

이제 저축과 자본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가진 자원을 자신의 시간선호에 따라 일부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여, 이를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재의 자원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가진 미래의 자원을 고용하여 시계를 생산하기 위한 소형 프레스 기계와 금형을 생산한다면, 저축은 프레스 기계와 금형이라는 자본재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프레스 기계와 금형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얻어진 다른 기계들과, 근로자, 토지, 시간 등이 더해져, 프레스 기계와 금형이라는 자본재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시계 생산이 가능해진다.

생산된 시계를 시장에서 팔아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저축을 통해 다시 시계 생산을 위한 프레스 기계와 금형의 생산 또는 구입과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재 형태로 자본재 획득에 사용된다. 증가한 저축이 투자됨에 따라 더 많은 자본재가 다시 만들어지고, 자본재가 많아져 더 많은 자본이 축적되고, 증가한 자본으로 미래에 더 많은 시계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프레스 기계와 금형 같은 자본재는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되어 사라지지만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에 의해 다시 생산된다. 이와 같이 저축된 자원은 프레스 기계와 금형 등의 자본재로 바뀌고 이들은 시계라는 최종 소비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저축은 생산 단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지만 결국 최종재로 나타나므로 경제적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프레스 기계와 금형 같은 자본재는 파손되거나 궁극적으로 수명이 다하여 사라지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최소한 더 적지 않은, 양의 자원이 시계라는 최종재로 확보되었고, 이 중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저축이 다시 프레스 기계나 금형 등의 자본재 획득에 투입되므로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 역시 소비와 저축 조정에 의해 경제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이전보다 더 적은 저축이 이뤄지고, 따라서 자본재에 대한 재투자가 줄거나 없으면 자본은 소비되고 미래의 생산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프레스 기계나 금형 같은 자본재에 귀속되는 순 보수는 무엇인가? 우선 자본재에 귀속되는 총소득은 이 자본재가 미래에 생산되는 최종 재화에 기여하리라고 예상되는 할인된 한계가치생산(Discounted Marginal Value Product: DMVP)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자본재는 애초에 자연에 존재하는 생산요소가 아니라 노동과 토지에 시간이 더해져 생산된 생산요소이므로 자본재가 얻는 총소득은 궁극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인 임금, 토지에 대한 보상인 임대료, 그리고 시간에 대한 보상인 이자로 모두 귀속되므로 자본재에 귀속되는 순소득은 0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항등순환경제(evenly rotating economy)에서는 자본재에 귀속되는 순소득은 0이 된다.¹⁷⁾

2. 시간선호

그렇다면 자본 축적의 근간이 되는 저축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사람들에게 “오늘의 100만 원과 1년 후의 100만 원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100만 원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17) 항등순환경제란 경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최종 상태를 의미하므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항등순환경제에 도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항등순환경제는 우리가 변화하는 현실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지적 구조물로서 기능한다.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보다 선호하는데, 이를 양(陽)의 시간선호(positive time preference)라고 한다. 즉 사람들은 현재의 자원을 동일한 양과 질의 미래의 자원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데, 그 차이가 이자이며 그 비율이 이자율이다. 따라서 이자는 현재 자원의 미래 자원에 대한 할증이자 미래 자원의 현재 자원에 대한 할인이다.

사람들은 주관적인 시간선호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현재에 소비하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한 개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전보다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보다 더 선호하게 되면 현재의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인다. 이 경우 미래의 자원은 현재의 자원에 대해 이전보다 더 할인되므로 이자율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머지않아 지구의 종말을 예상한다면 미래의 자원은 쓸모가 없다. 따라서 이자율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전보다 미래의 자원을 현재의 자원보다 더 선호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미래의 자원을 현재의 자원에 비해 덜 할인하므로 이자율은 내려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 시간선호를 가졌다면(물론 아무리 수전노라고 하더라도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현재의 자원은 전혀 쓸모가 없다. 따라서 이자율은 0이 될 것이다. 이로부터 이자율이 무한대라는 말은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자율이 0이라는 말은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자율은 0보다 크며, 이는 곧 사람들의 시간선호가 양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양은 소비해야 하므로 소득이 그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고 저축은 0이 된다. 즉 이자율이 무한대가 된다. 또한 이로부터 시간선호에 의한 저축과 이자율은 동일한 현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와 미래 간에는 시간이 개입되고, 사람들은 양의 시간선호를 가지므로 저축을 한다는 말은 저축을 바탕으로 미래에 얻을 가치보다 더 높은 현재의 소비에 따른 가치가 충족되고 남은 잉여를 가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소비하고 남은 자원이 없으면 저축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본재는 바로 이 잉여라는 저축을 바탕으로 획득되므로 저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재가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자본 축적이 이뤄지지 않는다. 물론 저축이 자본재 생산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생산 시스템 밖에 있는 저축은 내일을 위한 대비일 뿐, 자본재 생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소득이 아주 낮은 나라 사람들에게는 공급된 소비재 중에서 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주는 오늘의 소비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지, 그들이 소비하고 남는 잉여가 없어 저축할 여력이 없으며, 저축이 이뤄지지 않아 자본을 축적할 수 없고, 자본을 축적할 수 없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갖추 수 없으므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자본이 부족하다는 말은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시간이 걸리는 생산 과정을 견디면서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했다는 것은 노동과 토지 등의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시간이 저장된 자본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했다는 뜻이며, 자본재를 사용하면 자본재에 저장된 시간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최종 소비재의 생산에 더 빨리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본재를 사용하는 생산과 자본재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은 시간의 차이를 낳는다. 그러므로 자본이 부족하다는 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3. 자본가

자본가는 시간 시장에의 참여자다. 자본가는 노동과 토지라는 자연적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그의 저축을 바탕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재의 자원인 임금과 지대를 지불하고 그 노동과 토지를 활용하여 시간이 걸리는 생산을 통해 미래에 완성되는 제품으로부터 이자를 얻는 사람이다.

강조할 사항은 자본가는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현재의 자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가진 미래의 자원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여 미래에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보상인 이자를 소득으로 얻는다는 것이다. 흔히 이자를 자본재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자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완성되는 제품이 내구재든 소비재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재화에 적용된다.

또한 시간이 걸리는 생산구조는 보통 여러 단계(stage)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는 흔히 그 길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생산 단계의 단위 시간(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또는 1년)에 대한 이자율은 모든 생산 단계에서 같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른바 항등순환경제에서는 완전히 같아진다. 만일 생산의 5번째 단계가 1년이고 4번째 단계가 6개월이라면 5번째 단계의 자본가가 단위 자본 투자로 얻는 이자 소득은 4번째 단계의 자본가가 단위 자본 투자로 얻는 이자의 2배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생산 도중에 처음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시간에 대한 보상인 이자 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데, 다른 상황의 발생을 의미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인 이윤은 자본가적 기능이 아닌 기업가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 따

라서 자본가와 기업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본가-기업가가 얻는 소득에는 이자와 이윤이 혼재되어 있어,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요컨대, 자본가의 중요성은 시간을 매개할 사람이 없으면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고, 자본 축적이 없으면 자본주의적 생산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V. 기업가

1. 기업가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그 외연을 넓혀 가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인간이 계획할 것도 없고 결정해야 할 것도 없다.

인간 세상사가 불확실하다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기업가가 탄생한다. 즉 불확실한 상황에 당면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기업가다. 그런 점에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기업가다. 저녁 퇴근길에 어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운전자의 행위는 투기적이다. 어느 주유소의 가격이 더 낮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지 않고 대학 교육을 받는 것도 투기적 모험이다. 대학 교육을 받는 목적은 교양을 함양함은 물론, 특정 분야에서의 지식 축적을 통해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 미래의 소득 흐름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지만, 사후적(事後的)으로 그러한 목표를 잘 달성할 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 하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기업가적이다.

기업가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일컫지만, 보통 기업가라고 하면 불확실한 상업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윤 기회를 찾아나서는 행동인(acting person)을 말한다. 즉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불확실성 하에서 미처 발견되지 않은 이윤기회의 포착을 통해 부(富)를 창출하는 기능을 지닌 사람이다. 이윤 기회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나 생산물로써 미처 채워지지 않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2. 기업가 정신과 이윤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가의 소득의 원천인 이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risk)과 관련된 빈도(급간) 확률(class probability)과 불확

실성과 관련된 사례별 확률(case probability)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위험은 특정 사건이나 현상이 속하는 동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class)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으나, 그런 사건이나 현상 대해서는 그것이 그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볼트를 생산하는 회사의 품질보증 담당관은 과거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불량률이 평균적으로 이룰테면 1%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어느 볼트가 불량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경험적 확률과 그에 따른 손해액을 알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며, 이는 비용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위험은 이윤의 원천이 아니다.

위험 회피의 유용한 수단이 바로 보험이다. 즉 보험은 빈도 확률과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자동차 손해 보험회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를 통해 가입자 집단 전체의 연간 교통사고율을 알 수 있으나, 이 중 누가 언제 어느 정도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피보험자 전체 집단에 대한 경험적 확률과 평균적 피해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가급적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보험 대상자들의 성, 연령, 직업, 과거의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위험의 정도를 분류함으로써 집단을 동질화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불확실성은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집단 내에 동질화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런 사건이나 현상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각 사건이나 현상별로 고유하므로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그런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 기업가들의 예측에는 다소 유사한 점도 있지만 각 기업가에 고유한 것이어서 알 수 없는 사항도 많다. 따라서 기업가의 성공 여부 확률은 빈도 확률이 아니라 사례별 확률에 속한다. 당연히 경험적 확률과 평균적 피해액을 알 수 없다. 당연히 보험시장이 생기지 않는다. 기업가 정신이란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떠맡는 정신을 말한다.

이제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는 데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가가 얻는 이윤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기업가의 기능은 시장에서 저평가(underpriced)된 생산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어떤 생산요소가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시장의 일반적 예상이 그 생산요소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인 할인된 한계가치생산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동료보다 더 예리하게 발견하고 실행에 옮긴 기업가는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윤을 얻는다. 즉

생산요소의 가격이 잠재적 한계가치생산보다 더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요소들이 더 가치 있게 배치될 곳을 예견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잘 봉사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물론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기업가의 판단이 틀리고 사후적으로 과대평가되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기업가가 당면한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다.

3. 이윤의 기능

이윤 기회가 있다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즉 이윤은 부조화(maladjustment)의 지표로서 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원배분에 부조화가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자원배분의 부조화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에 의해 해소되며, 그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자본가-기업가는 종국적으로 이자 소득만을 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물 공급이 늘어나 그 가격이 떨어지고, 반면에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그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자원 배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굳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손해를 보는 기업가이지 이윤을 내는 기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강조돼야 한다. 손해를 보는 기업가는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기업가들을 사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그런 기업가들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업가로 나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I. 결어

이 글에서는 우리가 경제의 움직임과 현상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데 긴요하지만 신고전학파의 미시경제이론에서는 제공되지 않은 주제를 주로 논의했다. 특히 사유재산 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운행되는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경쟁, 자본과 자본재, 자본가-기업가, 이윤의 본질 및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시경제이론이 이들 주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행동하는 인간이 없는 특정 시점과 공간에서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스냅 샷' 현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미시경제이론으로써는 사회주의 몰락의 필연성, 시장질서의 형성과 운행 원리, 시장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평가,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의사결정, 특히 자본가-기업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교육 대상자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 모든 것이 알려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기계론적 분석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고전학과 경제학을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학은 수학과 그래프로 가득 차 있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수학적 기법을 익히는 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사상적 조류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다.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1000년 ‘중세’ 동안 쌓인 변화 압력으로 ‘근대’가 태동했고, 사상적 조류는 ‘신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신’으로 크게 바뀌었다. 천동설도 지동설로 바뀌었다. 오스트리안 경제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영용,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 “법치와 공정거래법,” *자유와 시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2014 pp. 19-45

도메 다꾸오, 우경봉 역,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동아시아, 2012년

민경국,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007

임일섭, 『행동규칙과 자생적 시장질서: 하이에크의 경제학 방법론과 시장이론』, 자유기업센터, 2000

칸트, 임마누엘 (Kant, Imanuel),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아카넷, 2014년

Armentano, Domonick T., 『Antitrust and Monopoly: Anatomy of a Policy Failure』, New York, Wiley 1982

Hayek, Friedrich von, “The Meaning of Competition,”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apter V,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p. 92-106

-----, 『The Constitution of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II』, 자유기업센터 1997

-----,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ume 1: Rules and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ume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민경국 역, 『법, 입법, 그리고 자유 II: 사회적 정의의 환상』, 자유기업센터 1997

Kim, Young-Yong,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 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년 6월, pp. 203-234

Kirzner, Israel M.,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공병호 역, 『경쟁과 기업가 정신』, 자유기업센터, 1995년

Knight, Frank H., 『Risk, Uncertainty and Profi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McNulty, Paul J., “Economic Theory and the Meaning of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 1968

Mises, Ludwig von.,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Scholar's edition, Auburn, Alabama: Mises Institute, 1998[1949], 민경국, 박종운 공역, 『인간행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년

-----,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0[1920]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A Treatise on Economic Principles』,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1[1962], 전용덕, 김이석 공역, 『인간, 경제, 국가』, 자유기업원, 자유주의 시리즈63, 2006

Salin, Pascal, "Cartels as Efficient Productive Structur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9, No. 2, 1996, pp. 29-42

오스트리안 경제학과 미시경제이론 (토론)¹⁸⁾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I. 개요

- 본 논문의 목적은 주류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있다고 봄.
 -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려되어 오던 문제였고, 경제학 교육이나 경제학자의 양성에 있어서 이론과 제도 현실과의 조화가 요구되어 왔음.
- 주류경제학의 의미는 미국 중심의 positive economic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사실상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 politico-economics)’으로서 경제학이 발전해 왔음.
- 오스트리안학파는 제도학파로서 명명되기는 하지만 정치경제학에서 보다 제도에 기초한 (혹은 반영한) 경제학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봄.
 - ‘완전경쟁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실질적으로 정부(역할)를 경제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정부의 행태는 매우 다를 수 있어서 ‘정부의 불간섭’은 결과적으로 주류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감.
-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생산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실증적 경제학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사실상 경제현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의 행태도 표면상으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제도는 개인, 혹은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공동체가 만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행위나 사고를 규제하게 됨. 따라서 주류경제학이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의 틀 속에서 경제학을 연구했다고 봄. 그러나 경제학

18) 자유경제원 워크숍 (2015.9.18.) 토론문임.

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과거에 대한 검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어서 본질적 제도 측면의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봄.

- 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민주주의 발제의 가장 기본은 자본주의경제학에서의 기본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식에서 필요하다고 봄.
- 주류경제학의 문제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고민해야 경제와 ‘경제와 관련된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II. 오스트리안학파는 어떻게 현실경제에 기여할 수 있나?

<사유재산권의 보호>

- 경제학에서 ‘사유재산’이 전제된다는 점에 공감하는데 사유재산의 개념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면 물질재산권, 지적재산권, 영업권, 이제는 폐기물에 대한 부(-)의 재산권까지 포함되어야 함. 여기에 시간에 따라 재산권이 증가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함. 이에 따라 경제학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새로운 재산권(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이론이 나와주어야 함.
- 이러한 요소들은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행위의 목표라고 봄. 문제는 이러한 자본을 경제학이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고 이에 따라 ‘행복’이라는 지표가 별도로 산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제도학파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산출하고 지켜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예를 들면, 부자/혹은 강자들의 사유재산권은 잘 지켜지는데 약자들의 사유재산권은 무시되고 지켜지지도 않음. 이는 불완전경쟁의 주요 요인임. 돈이 권력은 아니어야 함.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 경제 주체의 심리가 다양화하고 있음. 단순히 이윤이나 효용 등의 극대화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과 심리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면, 개인에 있어서는 효용극대화 뿐 아니라 애타주의나 이기심, 개

인적 노력, 기업에 있어서는 이윤극대화 뿐 아니라 주주이익의 극대화, 시장점유율 등, 특히 핵심적 생산요소인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가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요인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하여 다양한 변화를 보임.

<가치판단>

- 주류경제학의 가장 큰 약점인 가치판단의 문제는 제도를 통하여 해소할 수 밖에 없음. 다양한 정책적 옵션 가운데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임.
- 각각의 경제현상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제도적인 연구와 경험이 주류경제학에 반영되어야 함.
- 제도의 연구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기억들이 경제행태에 반영되게 됨.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실증경제학의 노력이 필요함.

III. 결어

- 경제학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줄이고 경제발전과 사회적 환경(양극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사회과학으로서 입지를 넓힐 수 있음.
- 경제 사회적 현상과 예측능력은 과거의 경험(data)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연구와 이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가치 판단(논의)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봄.
 - 경제학이 사회발전 이념(기업가 정신, 조화로운 사회, 포용주의 등)을 발전시킬 수 없음.

김영용 교수의 논문

“주류 경제학의 한계: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함의”에 대한 토론요지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 교수는 모두에서 수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주류경제학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경제학 교육, 역시 경제의 본질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인간행동에 바탕을 두고 현실경제를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김 교수는 이 글을 통하여 미시경제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시장 경쟁, 자본과 자본가, 기업과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 사유재산제도, 이윤, 그리고 특히 시간 선호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설명을 소개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 교수는 미시경제이론 분야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적 접근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과 통화량, 물가, 인플레이, 금리 등 거시경제 분야에도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였다. 특히 1929-1933년 대공황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규명한 대공황 원인은 후에 밀튼 프리드만을 수장으로 한 시카고학파가 주장한 대공황원인과 충돌함으로써 이 두 학파 간에 알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시경제이론에 있어서도, Carl Menger의 한계이론도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경제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후학들을 위해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그 당시에 번성할 수 있었는지, 역사적, 지정학적,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하여 뭉쳤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좌장이었던 Friedrich Hayek 교수가 주축이 되어 1947년 스위스에서 Mont Pelerin Society 포럼을 출범시켰는지 설명하였더라면 독자들로부터 고마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끝)

거시경제학:
화폐금융, 경기론, 케인지언 비판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과 다른 학파이론과의 비교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2005년 10월 20일 벤 버냉키(Ben S. Bernanke)는 미 의회의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지난 2년 동안 주택가격이 약 25% 정도 상승했다. 투기가 성행하는 일부 지역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러한 가격 상승은 튼튼한 경제기초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모기지 이자율이 낮고, 가계 형성율이 안정적이며, 일부 지역에서 주택공급의 증가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House prices have risen by nearly 25 percent over the past two years. Although speculative activity has increased in some areas, at a national level these price increases largely reflect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including robust growth in jobs and incomes, low mortgage rates, steady rates of household formation, and factors that limit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in some areas.”

한편 미국 오번 대학교(Auburn University) 교수이면서 미세스연구소의 연구위원인 마크 손튼(Mark Thorton)은 2004년 6월 4일 Mises Daily 칼럼을 통해 주택가격이 붕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가격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것은 연방준비가 2001-2003년 기간 동안 통화 공급량을 25% 증가시킨 것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느슨한 대출 행태를 장려한 것을 볼 때 주택가격이 붕괴될 수 있고, 파산이 증가할 것이며, 정부보증기관인 모기지 회사들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에게 다시 납세자들의 돈을 이용한 구제금융이 일어날지 모른다.”

“Higher price inflation should not have been a surprise given that the Fed has increased the money supply by 25% during the period 2001-2003. (...) Given the government’s encouragement of lax lending practices, home prices could crash, bankruptcies would increase, and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the government-sponsored mortgage companies, might require another taxpayer bailou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발원인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

났을 때 케인지언으로 유명한 악셀 레이온후프부드(Axel Leijonhufvud, 2008)는 “물론 이것은 케인지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과잉투자 이론에 잘 들어맞는다.”고 언급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위기가 케인즈 경제학보다는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으로 더 잘 설명된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Mises 1912, 1949; Hayek 1933)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불황과 경제위기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류경제학에서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다. 현실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제이론을 무시하는 것은 경제학계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며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경기순환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케인지언,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등의 위 신고전학파이론들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ABCT)

1) 자본이론

생산과정

재화의 생산에는 토지(광석, 석유, 산림 등의 자연자원 포함)와 노동, 그리고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은 토지와 노동과는 그 특성이 다르다.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재를 화폐가치로 평가한 개념으로서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자본재다.¹⁹⁾ 자본재는 노동과 토지처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원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 중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의 시간선호(positive time preference)를 가지고 있다. 양의 시간선호란 동일한 재화(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라면 현재 재화(소비)를 미래 재화(소비)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미래의 재화와 현재의 재화가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결코 저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은 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자원의 일부를 현재의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자가 산출된다. 즉 이자는 현재재화의 가치를 미래재화의 가치와 동일하게 만드는 매개다. 그래서 이자는

19) 따라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자본재에 대한 가격이 있어야 자본을 정의할 수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가 있어야 생긴다. 사적 소유물이 있어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재에 대한 가격이 없어 자본재는 존재하지만 자본은 없다. 따라서 자본 개념은 시장경제에서만 존재한다.

현재재화를 미래재화와 교환하는 가격이다. 그리고 이자가 시간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든 그 생산과정은 현실에서는 적어도 3단계를 거친다. 자원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어야 하고, 여기에 노동과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되어 자본재가 생산된 다음, 그 자본재를 이용하여 최종재화가 만들어 진다. 따라서 자본재와 최종재화 생산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일부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여 이를 다른 생산요소(노동과 토지)를 조합하여 자본재를 생산하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본가가 현재의 자원을 시간이 걸리는 생산에 투입하여 미래에 완성되는 제품을 팔아 소득을 얻으므로 그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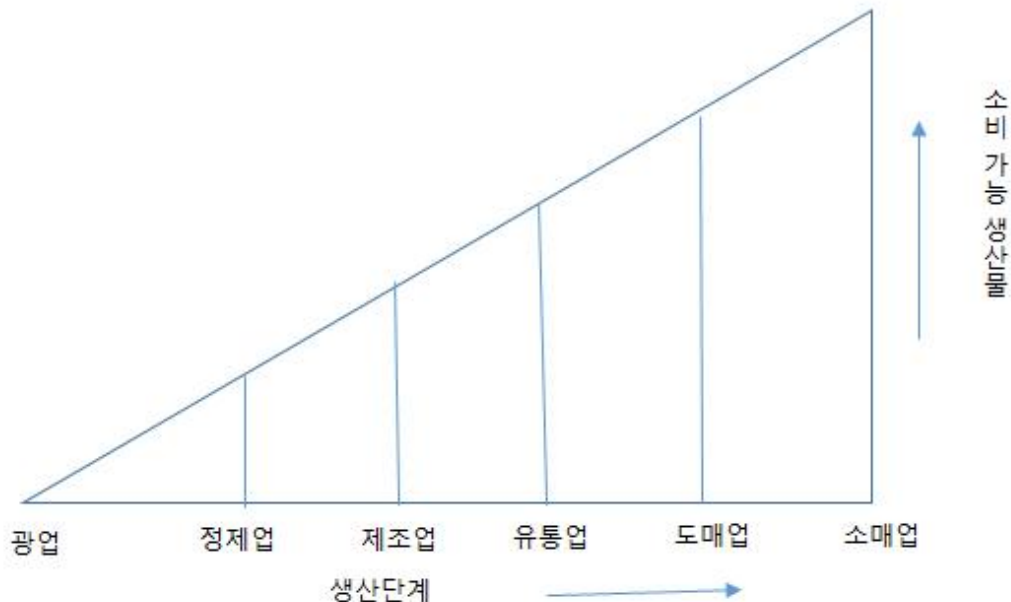
이러한 생산과정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분업이 발달할수록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달리 말하면 자본재 생산단계가 많아져 우회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맨 손으로 하루에 물고기를 3마리를 잡는 로빈슨 크루소가 잠깐 쉬고 어망을 만들어 이것을 사용하면 하루에 30마리를 잡게 된다면, 잠깐 쉬고 그물(자본재)을 만드는 것이 우회생산이다. 더 넓은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기 배를 만드는 것은 자본재 생산이 더 우회적으로 된 것이며, 최종 소비재에서 더욱 떨어진 것이 된다. 여기서 어망과 같이 최종 소비재에 가까운 자본재를 후기단계(late stage) 재화, 또는 저차재(low-order good), 배와 같이 최종 소비재에서 먼 자본재를 재화를 초기단계(early stage) 재화, 고차재(high-order good)라고 한다. 현대 경제에서 최종 소비재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최종재화가 생산되기까지 자원이 초기단계(고차재)에서 후기단계(저차재)로 이동되는 과정은 <그림1>의 하이에크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삼각형의 밑변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생산과정을 보여준다. 왼쪽으로 갈수록 최종소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차재 산업이다. 예를 들면 철광석과 같은 광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조업,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 순으로 소비자의 최종소비와 가까워진다. 분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최종소비재에 도달하는 단계가 증가한다. 그림에서는 삼각형의 수직선은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말해준다. 생산과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추가되고 최종단계는 최종 소비재로서의 생산

20) 자본가가 얻는 소득은 기업가가 얻는 이윤과 다르다. 이윤은 기업가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는 데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자본가가 얻는 보상인 이자와 기업가가 얻는 이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자본가가 최종재를 만들어 파는 경우 그가 얻는 소득에는 이자와 이윤이 혼재되어 있어 자본가와 기업가를 개념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물이다.

<그림1> 하이에크 삼각형



자본구조와 자본재의 전용한계성

실제로 자본은 노동과 결합하여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다른 생산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자본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질적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본재의 가치는 기업가의 주관적인 생산계획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시점이 다른 재화는 경제적으로 다른 재화일 뿐만 아니라 특정 생산과정에 투입된다. 그리하여 한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자본재가 다른 재화의 생산으로 전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Garrison 2001, McCulloch 2014).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워킹화 생산 공장 대신 스킨로션 생산 공장을 지었다고 하자. 그런데 1년 후 스킨로션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워킹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스킨로션에 투입했던 자본재를 바로 워킹화 생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면 수요에 맞춰 워킹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러나 실제로는 스킨로션 생산에 투입했던 자본재를 워킹화 생산으로 전용할 수 없어 수요에 맞춰 워킹화를 생산할 수 없다. 이것은 1년 전에 워킹화를 생산할 수 있었던 생산능력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음 기에 각 재화의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시점 간 과오투자(malinvestment)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재의 전용한계성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경기변동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고, 시간선호가 변하며 그에 따라 투자와 소비의 비중이 달라진다. 또 노동력의 양과 질이 변하며, 어떤 자원은 고갈되기도 하고 새로운 자연자원이 발견되기도 한다. 기술의 변화가 생산가능성을 변화시킨다. 기후변화가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세계에서 전형적인 생산의 형태는 시장의 예측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예측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마다 다르다. 시장을 잘 예측하여 생산한 기업가는 성공하여 이윤을 얻고 그렇지 못한 기업가는 생산한 물건을 팔지 못해 손해를 본다. 그래서 개별 시장이나 산업에서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한 부조화는 기업가의 조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경기순환이론이 문제 삼는 것은 이런 개별 시장이나 산업에서의 부조화가 아니라 경제전체의 부조화다. 다시 말하면 왜 갑자기 다수 기업가 또는 많은 기업가의 예측이 실패하고, 그런 예측의 실패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집중되어 경제 내에서 대규모의 '과오'(error)가 초래되는가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과오가 결국 불황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근접한 재화보다는 소비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재화에서 변동이 크게 발생한다. 경기순환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기순환 이론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은 앞에서 설명한 자본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저축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려는 자본가를 생각해 보자. 그는 그 결정을 할 때 기회비용,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축을 빌려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보다 자신이 직접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클 경우 생산 활동을 선택할 것이고, 시장이자율이 생산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예

상수익보다 높으면 빌려주는데 쓸 것이다. 그리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여가 줄고 생산 활동에 쓰이는 자금이 많아진다. 반대로 이자율이 오르면 대여가 증가하고 생산 활동으로 가는 자금이 준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며, 예상수익이 낮은 장기프로젝트 수행이 증가한다.

동시에 이자율은 소비자가 소득 중 소비를 더할지 저축을 더 할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소비자들은 저축을 덜하고 소비를 더하게 된다. 여기서 이자율 하락이 소비자의 시간선호가 낮아진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확대통화정책을 통한 신용확대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시간선호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에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그러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중앙은행의 확대통화정책에 따른 신용확대가 없으면 투자지출을 위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가계의 저축뿐이다. 중앙은행이 신용을 확대하면 그 저축과 투자 간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투자지출로 가는 대부자금이 가계에 의해 저축된 양을 초과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시장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투자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저축을 감소시키면서 소비지출을 늘린다.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가는 투자활동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그 줄인 자금을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빌려주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실물자본은 비유동적 자산이고 일단 저축이 생산 활동에 투자되면 즉각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자본재의 전용한계성 때문이다. 금융자본과 실물자본 간에 서로 전환하는 비용이 비대칭적이다. 금융자본은 유동성이 높아서 대부시장으로부터 생산 활동으로 쉽게 이동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이 실물자본에 묶여 있으면 생산 활동으로부터 대부자금 시장이나 다른 생산 활동으로 이동하는데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를 때 자본구조(생산구조)를 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

경기순환은 소비자의 시간선호 변화로부터 오는 이자율 변화에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의 확대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 하락으로부터 일어난다.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시장수준 아래로 인하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로 시장금리에서는 수익성이 없었던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그 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확대통화정책을 통한 낮은 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저축할 유인이 줄어 더 많은 것을 소비한다. 그래서 자본재를 만드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소비부문 역시 호황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문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용이 증가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쟁으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고 사람들은 이러한 호황에 도취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착각이다. 이것은 정부의 금리 왜곡으로 기업가들을 오도하여 잘못된 투자를 유도한 결과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기 때문이지만, 정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은 소비자의 수요와 경제상황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는 저축을 늘리지 않았고 현재의 소비를 줄이려는 욕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인위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익성이 없다고 정확하게 평가되었을 투자결정이 갑자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게 한다.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비이성적인 투자결정이 내려지고 투자활동이 왜곡된다. 저렴하게 신용을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가 ‘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적기, 혹은 고차재에 대한 투자시기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소비대중은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겠거나 기업이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저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은 저축과 투자 간의 불일치를 초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생산의 조정에 혼란이 초래된다. 소비대중에게 ‘현재’의 소비를 줄일 의사가 전혀 없는 시점에 ‘먼 미래’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기’투자가 촉진된다. 소비자가 더 많이 저축하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미래의 생산을 위해 자원을 축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투자자들이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할 기회를 엿보는 바로 그 때에 낮은 이자율로 인해 소비자는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라인으로 자원이 잘못 배분된다.

시간이 흘러 장기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는 기업은 노동과 원자재 등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 저축총량은 기업가들의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따라서 장기프로젝트에 필요한 생산요소가 기업가들이 원하는 양에 비해 매우 적다. 그래서 노동과 자원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기업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상승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투입요소의 가격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의 차입이 필요하다.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이제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업이 실행에 옮기려던 장기투자 사업 중 일부는 완수될 수 없게 된다. 모든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을 정도의

부는 사회에 축적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낮춰진 금리가 보낸 잘못된 신호였을 뿐이다. 인위적인 저금리가 모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요구되는 실제 자원을 공급하는 마법을 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호황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곳곳에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기업은 생산 규모를 늘리며 사람들은 소비를 즐긴다. 그러나 경제가 사상누각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곧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과열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잘못 투자된 사업을 중지해야만 하고 설비를 매각해야만 한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기업가는 물론 사회 전체 역시 더 가난해지게 된다. 인위적인 호황과 과열 뒤에 붕괴와 불황이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경기순환을 야기하는 요인은 시장경제와 별로 관련이 없다. 시장이 결정했을 이자율의 수준보다 금리를 더 낮춘 정부정책이 원인이다.

만일 정부가 불황을 치유하기 위해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면 불행을 초래한 원인으로 다시 불행을 치유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생산으로 초래된 고통을 더욱 심화시켜 훨씬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각하고도 급속한 인플레이션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뒤따른다.

3. 실제 사례들과 실증분석 결과

Rothbard(1962, 19780)은 1930년대 대공화의 원인은 미국의 잘못된 통화정책에 있으며, 그것이 장기화 된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20년대 미국 정부는 통화팽창정책을 썼다. 미국이 통화팽창 정책을 썼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20년에 왔던 불경기가 1921년에 바로 끝나고 생산이 증가하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우려한 연준이 통화량을 늘렸다. 또 하나는 1차 대전 후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하락하여 파운드 약세가 지속되자 전전의 환율을 유지하고자 미국이 통화량을 늘렸다. 1921년 중반에서 1929년 중반까지 통화량이 60%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통화 증가로 대부자금 시장에서 실질이자율이 떨어졌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였고, 주가가 상승하여 경제가 붐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붐은 지속될 수 없어서 결국 버스트가 왔다. 1929년 버스트는 인위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그에 따라 생산이 줄고, 노동자가 해고되며, 자본재들이 손해를 보면서 처리되어야만 했다.

그렇게 하여 불황이 왔다.

불황은 이전의 시기에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치유가 끝나면 경제가 회복되게 된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의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경기침체가 1930년대 내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데 있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연속적인 구제정책 때문이었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잘못된 투자의 즉각적인 청산과 유동화를 방해함으로써 잘못된 투자가 청산되지 않고 지속되게 만들어 비교적 단기로 끝났었을 불황을 장기화시켰다.²¹⁾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도 통화정책의 잘못에 있다(안재욱 2009).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는 2001년 911테러, 기업의 회계 부정 등 일련의 충격으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예상하여 저금리 정책을 썼다. 연준이 우려했던 위기는 오지 않았지만 연준은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낳았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진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주택대출을 해주었다. 대출 경쟁으로 모기지 금리가 낮아졌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다. 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이 소비자들과 금융회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엄청난 자원을 주택부문으로 이동시켰으며, 부동산 가격을 가파르게 상승시켜 거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가 손실을 보증해주는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주택저당증권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만 열중함에 따라 더욱 증폭되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호황과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거품과 호황은 충분한 자원이 확보된 상태에서가 아닌 사상누각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터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금리가 오르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모기지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대출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과 같은 투자은행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뿐만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신생기업들의 주가가 치

21) 이러한 견해는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의 견해와는 아주 다르다. 케인지안(Keynes 1936; Hicks 1939; Modigliani 1944)은 대공황이 기업가의 비관적인 전망과 유동성 함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1928-29년 동안 본원통화가 두 배나 증가했지만 이것들이 기업 대출로 나가지 않고 은행의 초과지준으로 남아있었다. 기업의 대출이 급감한 것은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었으며, 명목이자율이 매우 낮아 은행들이 채권을 구입하지 않는, 즉 화폐수요가 완전탄력적인 유동성 함정이 생겼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Friedman & Schwartz(1963)은 2차 불황이 온 것은 연방준비가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본원통화의 증가는 은행의 지준금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현금보유에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 민간의 현금보유는 기업 대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정자산인 단기 재정증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자율이 낮아졌다. 그런데 1931년 연방준비는 할인대출을 줄였다. 1931-32년 소비자물가가 10%나 하락하며 물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 실질 금리가 매우 높았는데, 이것은 긴축통화정책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편, 1936-37년 기간 동안 지준율을 두 배로 인상해 2차 불황을 초래했다고 한다.

솟았다가 2000년 급속하게 하락한 닷컴 붐과 역시 연준의 통화팽창정책 때문이었다. 연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통화 공급량이 1995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52% 상승했다. 방만하게 풀린 통화량이 닷컴 주식을 끌어 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웹프로그래머와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메임 등의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닷컴 과열이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재화와 용역의 가격 상승이었다.

이외에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을 이용하여 경제위기를 설명한 연구들이 많다. O'driscoll & Shenoy(1976)은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을 이용하여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한다. 1970년대 통화팽창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가격들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한다. Powell(2002)는 1990년대 일본의 불황을 오스트리안 이론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Keeler(2001)는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50년 1/4분기에서 1991년 1/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폐, 이자율, 생산능력 이용(capacity utilization),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기순환이 화폐충격으로 야기되고 상대적 가격 변화가 확산되어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오스트리안 경기순환 이론의 내용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또한 Mulligan(2006)은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오스트리안 경기순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1959-2003년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질소비량, 장단기 이자율 스프레드, 실질이자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자율 기간구조가 소비자의 시간선호와 투자기회에 따라 자원과 생산을 배분하면서 생산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 간의 자원배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시점 간 자원배분, 생산, 고용에 관한 오스트리안 경기순환 이론에 대한 계량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4. 경기순환에 대한 다른 학파의 견해²²⁾

1) 케인즈 학파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자본이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케인즈 이론에서는 시점 간에(intertemporally)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 즉 자본재 시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 이론에서 이자율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케인즈의 일반

²²⁾ 오스트리안 이론과 다른 거시경제학파 견해에 대한 비교는 Garrison(2001, 200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이론이 자본이론을 포함하지 않는 사실은 케인즈의 이론이 고정된 자본스톡과 고정된 자본구조를 가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정 하에 케인즈는 다른 거시경제 변량, 즉 소비지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소비지출은 소득에 따라 변동한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지출이 늘고 소득이 떨어지면 소비지출이 준다. 단기 소비함수가 이 이론의 기초가 되며, 투자 자금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유희 화폐잔고는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소비성향과 투자자금 및 화폐잔고에 대한 탄력성에 기초한 케인즈 이론은 투자지출이 전적으로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2단계모형이다.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생산에 대한 투자를 줄여 결국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득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소비가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 된다. 소비하려는 의지가 고용수준과 국민소득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케인즈 승수들이 투자지출과 고용변화를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케인즈 이론은 불황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에 둔다. 유효수요의 하나인 투자지출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즉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에 따르면 기업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확신이 커지면 붐이 일어나고 그 확신이 없으면 버스트가 일어난다. 기업의 확신이 줄어들면 투자지출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승수효과에 의해 경제전체의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 불황이 온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며, 임금은 노조나 임금 경직성 때문에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시경제 문제는 시장 이외의 힘이 시장의 잘못을 시정할 때까지 지속된다고 주장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승수효과에 의해 정부지출의 몇 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이러한 결론은 자본이론의 부재에서 온다. 시점 간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이 없으면 시점 간 시장은 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중에 케인즈 학파는 자본스톡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스톡의 변화를 경제성장의 연구에서 다룬다. 그러나 대부분 암묵적으로 자본스톡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거시경제를 접근하고 있다.

2) 통화주의

케인스경제학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가정은 자유시장경제는 원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늘리고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완전고용에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케인스경제학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의심에 태클을 걸었다. 그는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87-1960*(1963)을 통해 프리드먼은 ‘화폐가 중요하지 않다’는 케인스의 명제를 뒤집은 것은 물론 1930년대 공황의 진짜 원인이 Fed의 통화정책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통화량이 1/3이상 감소하였음을 발견하고 대공황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천적인 불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프리드먼은 일단 화폐제도가 안정되면 Adam Smith가 말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잘 작동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정부의 화폐교란이 시장경제를 왜곡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요컨대 프리드먼에 따르면 경기순환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유발하는 것이며 화폐 안정성이 경제안전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원리를 Fisher의 화폐수량설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통화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경제 안정에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중앙은행은 재량(discretion)이 아닌 엄격한 준칙(rule)에 의거 통화신용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창하였다. 한편, 그는 통화준칙이 물가 준칙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프리드먼은 경제안정화를 위해 경제성장률과 통화증가율을 일치시키는 k% 준칙을 제안하였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는 통화주의자와 오스트리아 학파가 공유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통화주의자와 오스트리안은 통화팽창에 의해 촉발된 자동복귀과정(self-reversing process)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통화주의와 오스트리안이 다른 점은 오스트리안이 자본재 시장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통화주의는 노동시장에 중점을 둔다. 통화주의는 장단기 필립스 곡선을 이용하여 노동-여가의 왜곡을 분석한다. 화폐 교란으로 자연실업률로부터 멀어졌을 경우 임금과 산출물 가격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연율로 되돌아간다는 시장과정을 설명한다.

통화주의에서 자동복귀과정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효과의 인식차이에 의해 작동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

식의 차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올랐다고 믿는 반면 고용자는 실질임금이 떨어졌다고 믿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다.²³⁾ 그렇게 되면 단기 필립스곡선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진다.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예상되어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실질임금률 변화에 대한 믿음의 차이 없게 되면 단기필립스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여 완전고용으로 복귀한다.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은 그 반대의 경우다. 인식의 차이로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떨어졌다고 믿는 반면, 고용자가 실질임금이 올랐다고 믿는 경우 고용이 줄어 단기 필립스 곡선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실질임금 변화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없을 때 단기 필립스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완전고용상태로 복귀한다.

통화주의의 이런 자동복귀과정은 자본구조에 어떠한 교란도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화주의는 화폐유입에 따른 시점 간 불균형이 야기되는 생산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통화주의 이론에는 케인즈 경제학과는 달리 자본이론이 있다. 그러나 그 자본이론은 오스트리아의 자본이론과는 다르다. 오스트리아 자본이론은 생산과 소비가 시점 간 분리되는 활동을 다루는 반면, 통화주의의 자본이론은 소득과 그 소득이 자본화될 수 있는 자산(stock)을 구분해서 다룰 뿐이다. 그래서 통화주의의 자본이론은 시점 간 시장과정과 그 과정을 방해하는 화폐적 교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통화주의는 신용팽창의 효과를 단지 물가수준에만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질 산출물의 증가가 신용팽창의 물가에 대한 효과를 상쇄하여 물가수준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임금에 대한 오해는 없어 노동시장에 아무런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팽창으로 화폐 교란이 일어나면 상대가격이 변하여 노동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시간이 걸리는 특정 기술의 개발과 특정 장기 생산과정에 보완적인 기술개발은 인적 및 비인적 자본의 시점 간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통화주의이론은 이러한 신용팽창의 효과 또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 통화정책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기변동의 원인이 화폐라는 점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리드먼의 주장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다르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1930년대 대공황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프리드먼은 충격 이후, 즉 1930년대 초 통화량 감소에 따라 불황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공황의 시발점

23) 노동자들이 소비자의 구매력의 관점에서 인지되어 실질임금이 오른다고 믿을 수 있고, 고용자는 기업의 산출물 가격의 견지에서 실질임금이 떨어진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인 1929년의 주가 폭락에 대한 설명을 시카고학파들은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강한 형태(strong form)의 효율적 시장가설은 주택버블과 같은 것의 존재를 부인한다. 합리적 경제주체와 신속히 청산되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자본구조에 대한 정치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시카고학파는 불황을 갑작스런 ‘충격’에 기인하는 ‘균형’ 결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시카고학파들은 시장금리 이하의 금리로 인해 야기되는 왜곡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은 피셔가 1930년대 공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였다. 당시 통화량이 늘어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적인 것을 보고 통화팽창에 의한 주택시장에서의 버블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에서야 통화주의는 Fed의 제로금리 정책을 비난하기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Fed의 ‘긴축통화’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주의가 대공황의 원인이 자유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실패인 것을 밝힘으로써 자유시장경제를 케인스경제학으로부터 복원하는 데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통화주의 이론은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새고전학파²⁴⁾

케인지안이론은 소비재시장은 잘 작동하는 반면 자본시장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총산출량은 노동의 고용량뿐만 아니라 투자 지출에 비례한다. 한편 통화주의는 자본시장에서는 (비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임금에 대한 오해로 단기에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통화주의 이론에서는 총산출량이 노동고용과 비례하게 된다.

새고전파 이론은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와는 달리 잘 작동하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이론은 모든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합리적 기대의 가정 하에 모든 시장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인다고 본다. 그래서 예상된 통화정책은 총산출량과 실업률에 효과가 없고, 단지 예상치 못한 안정화정책만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실상 통화당국의 안정화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4) 새고전학파에 관한 내용은 Lucas(1981), Phelps(1970), Barro(1976) 등을 참조하기 바람.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제가격과 균형가격, 또는 실제량과 균형량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지적 기대(local expectation)와 전체적 기대(global expectation)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섬 경제(island economy)를 가정한다. 섬 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 조건의 변화와 화폐 공급의 충격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명목가격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알지만, 화폐공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공급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지식의 차이로 인해 실제 가격들이 균형 수준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하여 국지적 경제에서는 화폐교란이 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경기변동의 주요인이 화폐 교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고전학파는 통화주의와 오스트리안과 동일한 입장이다.

한편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새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는 서로 유사하지만 양자 간에 차이는 있다. 새고전학파가 다루는 지식은 화폐공급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과 다른 경제 변량에 대한 지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고전학파는 사람들이 명목가격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지만 화폐공급변화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가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그 시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반면 오스트리안이 다루는 지식은 이론적 지식과 기업가적 지식이다. 이론적 지식이란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기업가적 지식은 시스템 내에서 경제를 작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 실제로 시장 참가자들은 경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업가 지식은 갖고 있지만,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스트리안이 다루고 있는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모형화 장치가 아니고, 실제경제의 근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새고전학파의 섬 모형에서는 사실상 단 하나의 상품만이 공급되고 수요 된다. 그러한 모형에서는 어떤 종류의 생산과정도 다루지 않는다. 또한 현재 재화를 소비하거나 나중의 소비를 위해 비축해두는 것 간에 선택을 다루지 않는다. 그런 모형에서는 화폐주입은 이전 지출의 형태를 띠 뿐, 신용확대로 발생하는 금리효과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으로는 자본집약적인 현대경제에서 일어나는 경기순환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다른 학파의 이론들이 오스트리안 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초점을 맞춘 시장에 있다. 오스트리안 이론은 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편, 다른

학파들은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학파들은 자본에 관한 이론이 없다. 자본은 단순히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다를 뿐이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자본재의 다양성과 전용한계성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생산과정을 매우 단순하게 다룬다. 그러한 전제하에 모든 거시경제의 변동을 노동시장에서 찾는다.

5. 결론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경기순환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의 생산과정을 너무 단순하게 다루는데 있다. 그것은 주류경제학에 자본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안 경기변동이론에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함의가 있다. 주류경제학은 경기순환의 정확한 특성을 설명하는 오스트리안의 경기순환이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더욱 잘 설명하는 경제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참고문헌

- 안재욱. 2009. “최근의 금융위기와 화폐금융제도의 변천”,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학회 발표 논문.
- Bernanke, Ben S. 2005. “The Economic Outlook,”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Oct. 20.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cea/econ-outlook20051020.html>
- Friedman, Milton, and Anna J. Schwartz. 1963.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 NBER.
- Garrison, Roger W. 2005. “The Austrian Theory of the Business Cycle in the Light of Modern Macroeconomic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3, 3-29.
- . 2001. *Time and Money: The Macroeconomics of Capital Structure*. London: Routledge.
- Hayek, F.A. [1933] 1966.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 New York: Augustus M. Kelley.
- Keeler, James P. 2001. “Empirical Evidence on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4:4, 331-351.
- McCulloch, J. Huston. 2014. “Misesian Insight for Modern Macro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17, no. 1, 3-18.
- Mises, Ludwig von. [1949] 1998. *Human Action*. 5th ed.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Mulligan, Robert F. 2006. “An Empirical Examination of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9 (2), 69-93.
- . [1912] 1980.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Indianapolis: Liberty Classics.
- O'Driscoll, Gerald P., and Sudha R. Shenoy. 1976. “Inflation, Recession, and Stagflation.” In *The Foundations of Modern Austrian Economics*. Edwin G. Dolan, ed. Kansas City: Sheed and Ward, 185-211.
- Powell, Benjamin. 2002. “Explaining Japan's Recess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5 (2), 35-50.
- Rothbard, Murray N. [1962]. 2000. *America's Great Depression*. 5th ed.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 . 1978. “Austrian Definitions of the Supply of Money.” In *New Directions in Austrian Economics*. Louis M. Spadaro, ed.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43-56.
- Thornton, Mark. 2004. “Housing: Too Good to Be True,” *Mises Daily*, June 4.
<https://mises.org/library/housing-too-good-be-true>

오스트리안학파에 대한 시카고학파의 비판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 이자이론

오스트리안학파는 양의 시간선호(positive time preference)로부터 이자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다. 양의 시간선호는 양의 할인율(positive discount rate)을 의미한다. 이자는 다음과 같이 소비의 이시적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불연속시간(discrete time) 모형을 고려하자. 효용극대화를 하는 소비자는 다음의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을 충족한다.

$$U'(c_t) = \frac{1}{1+\delta} (1+r_t) U'(c_{t+1}).$$

여기서 $U(\cdot)$ 는 매기마다의 효용함수, c_t 는 t 기의 소비, r_t 는 t 기의 이자율, δ 는 할인율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1+r_t = (1+\delta) \frac{U'(c_t)}{U'(c_{t+1})}. \quad (1)$$

t 기의 이자율은 할인율과 t 기와 $(t+1)$ 기 소비의 한계효용의 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두 기의 한계효용의 비는 두 기의 소비의 상대적 크기와 효용함수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효용함수가 불변 상대적 위험회피(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라고 하자.

$$U(c_t) = \frac{c_t^{1-\theta} - 1}{1-\theta}.$$

이것을 식 (1)에 대입하면

$$+r = (1+\delta) \left(\frac{c_{t+1}}{c_t} \right)^\theta. \quad (2)$$

여기서 $\frac{1}{\theta}$ 는 이시적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으로 비음수(non-negative)이다.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율은 할인율만의 함수가 아니라 이시적 대체탄력성과 두 기의 소비 비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할인율과 이시적 대체탄력성은 변하지 않는 모수(parameters)로 취급되므로, 이자율은 두 기의 소비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자의 시간선호가 하락하면”은 “할인율이 하락하면”으로 해석된다. 모수인 할인율이 하락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두 기의 소비 비율이 변하지 않아야 할인율의 하락이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할인율이 하락할 때 현재(t기)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다음(t+1) 기의 소비를 늘리면 할인율의 하락을 상쇄하여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가? 수식을 사용하여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기 때문이다. 수학적 논리만큼 정확한 논리는 없다. 경제학은 수학적 논리를 사용하여 엄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경기순환이론

오스트리아학파가 경기순환의 원인으로 정부의 확대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 하락을 지적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맞다. 시카고학파는 예상하지 못한 통화(unanticipated money), 생산성 충격(productivity shock) 등을 경기순환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오스트리아학파가 확대통화정책에 의한 이자율 하락을 “착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경제이론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고 모든 가격이 그만큼 뒤틀릴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즉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가 될 것이다. 예상된 통화의 변화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균형

오스트리안학파는 균형(equilibrium)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시카고학파가 균형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균형이란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모든 것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균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수학적 논리(fixed point theorem)를 통해 엄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균형에서 성립하지 않는 현상은 매우 찰나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균형이라는 문턱(threshold)을 통과해야 이론으로서의 논리적 적합성을 얻게 된다.

4. 자본재의 전용한계성

오스트리안학파가 지적한 자본재의 전용한계성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timing이 다른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에 대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적용되면 전용한계성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전용한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한 예가 Kydland and Prescott(1982)의 “time to build” 모형이다. 그러므로 전용한계성도 시카고학파의 이론에 녹아들어갈 수 있다.

참고문헌

Kydland, Finn E., and Edward C. Prescott.

"Time to build and aggregate fluctuations." *Econometrica* 50 (6) (November 1982): 1345-1370.

논평: 대공황 케인즈 자유시장경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I. 大恐慌에 대하여

1. 1920年代의 世界經濟狀況과 大恐慌의 發生

가. 1920年代의 世界經濟狀況

1920년대의 세계경제는 1920~21년의 沈滯期를 거쳐 1923년부터는 전후복구정책 등에 힘입어 上昇期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新興産業의 발전, 金本位制度로의 복귀, 國家間 經濟主導權의 이동 등으로 세계경제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시기였다. 전쟁중 크게 발달한 자동차, 라디오 관련산업과 戰後復舊, 都市化 등으로 성장한 건설관련산업이 새로운 民間需要를 창출하였다(Temin, 1994).

국제금융제도면에서는 1차 대전중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 金本位制度로 復歸하였는데 이러한 금본위제도는 각국 중앙은행의 通貨政策에 制約을 주었다(Bernanke and James 1991, Eichengreen 1986).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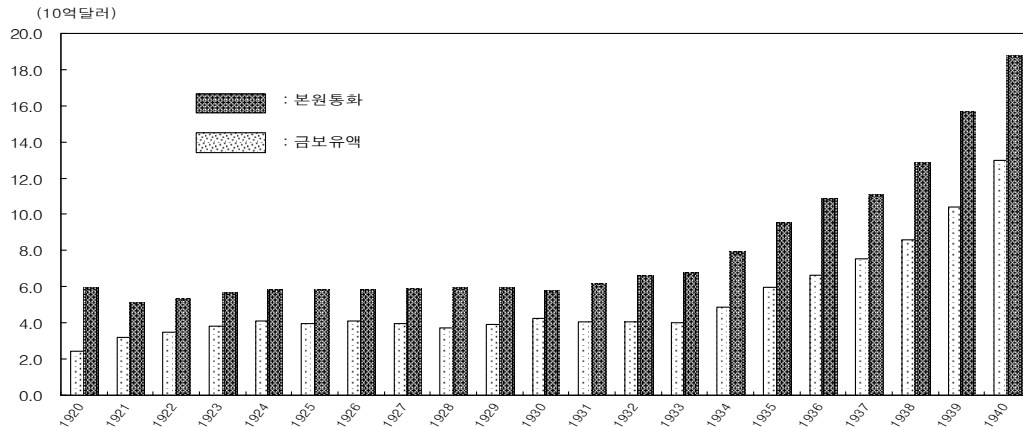
국제금융제도 약사

시 기		주 요 내 용
o 1880	~1913	고전적 금본위제도
o 1913	~1920년대 초	자유변동환율제도 (1차 대전으로 금본위제도 중단)
o 1920년대 초~1930년대 초		금본위제도로 복귀 (영국 1925.5, 오스트리아 1925.4, 프랑스 1928.6)

金本位制度로 인해 本源通貨 供給이 制約됨으로써 회복 가능하였던 불황을 공황으로까지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金本位制度를 폐기했다.

<그림 1>

본원통화 및 금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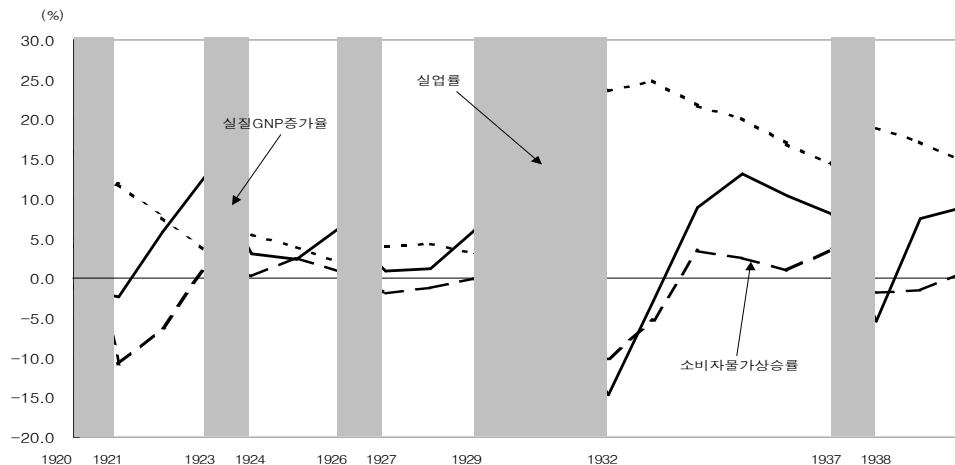


자료: Gordon(1986),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1943)

通貨供給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자동차, 라디오 관련 산업과 戰後復舊, 都市化 등으로 성장한 건설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증가해 1923~29년중 높은 成長勢를 持續²⁵⁾했다. 1923~29년중 실질GNP는 연평균 3.3% 성장(Gusmorino 3rd, 1996)했다.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어 1922~29년중 製造業 勞動生産性 증가율이 62.6%에 달해 크게 증가한 企業利潤(62%) 및 配當所得(65%)은 投機資金 形成을 촉진하였다.

<그림 2>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질GNP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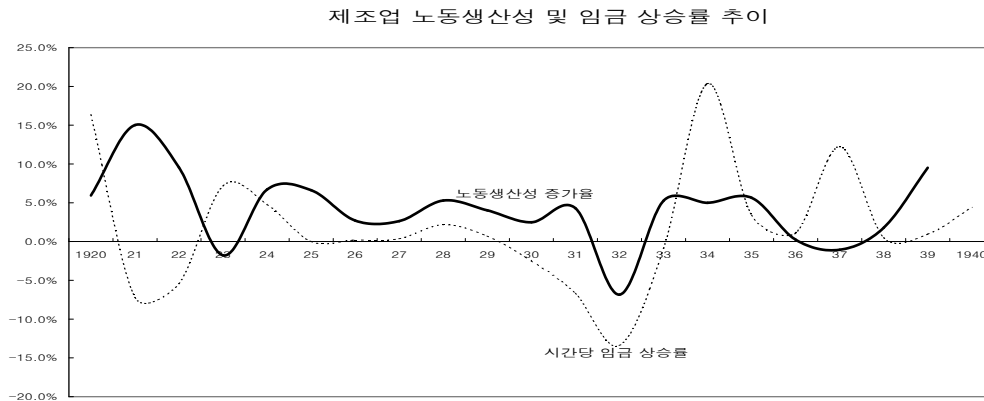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1965)

戰後의 도시화 등에 의한 建設景氣로 막대한 開發利益과 資本利得의 발생

25) 이러한 현상을 당시 대통령 이름(Calvin Coolidge)을 따서 “Coolidge Prosperity”로命名한 바 있다.

하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投機的 대출도 急増하여 1923~29년중 銀行 貸出은 31.8% 증가한데 비해 不動産 關聯貸出은 48.8% 증가하였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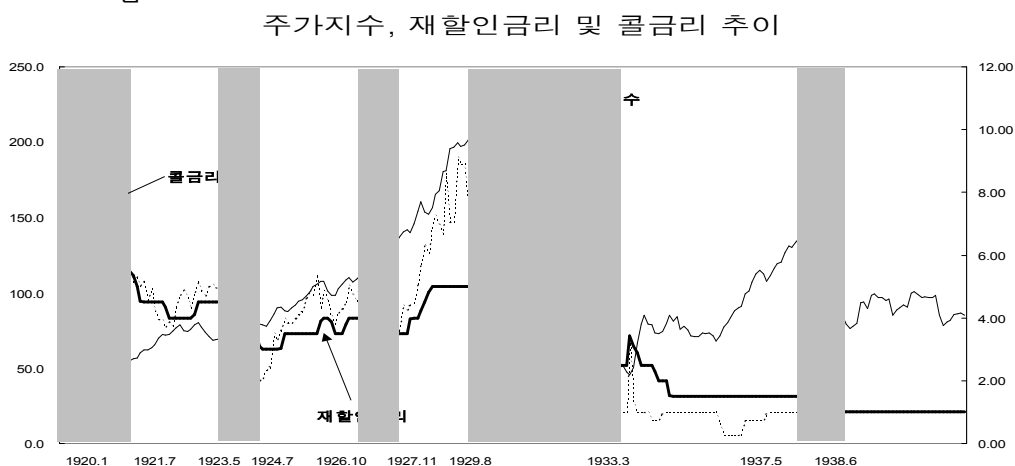


자료: U. S. Bureau of the Census(1965)

나. 大恐慌의 發生

자동차, 라디오 등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서 割賦金融을 통한 구매가 급증하여 1925~29년중 할부금융액은 14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급증하였으나 소득증가가 수반되지 않고 할부금융에 의존한 購買力이 限界를 보이면서 1929년 들어 이들 두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在庫가 増加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



주: 음영부분은 경기하강기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1943),

Macaulay(1938), NBER Macrohistory Database

1921년 8월을 底点(주가지수 54.8)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1928년 2월(주가지수 139.7)부터 1929년 9월(주가지수 237.8)까지 폭등세를 보이면서 投機場勢化되었는데 당시 景氣는 이미 1929년 8월을 頂点으로 收縮局面으로 바뀌어 在庫 増加와 産業生産 減少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鎮靜시키기 위해 미 연준은 1929년 8월에 재할인율을 5%에서 5.74%로 인상하고 9월에 다시 6%로 추가 인상하는 등 金融緊縮을 斷行하였고 이후 거품증세를 보이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29년 10월 29일(Black Tuesday) 株價 大暴落을 계기로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공황이 장기화되고 깊어지면서 所得 急減, 失業率 急上昇, 物價 暴落이 초래되어 實質GNP(기준년 1929년)는 1929년의 1,044억 달러에서 1933년에는 742억 달러로 28.9% 감소하였고(동 기간중 경상GNP는 46.4% 감소) 失業率은 1929년의 3.2%에서 1933년에는 24.9%로 급상승하였다.

한편 消費者物價指數(1947~49년:100)는 1929년의 73.3에서 1933년에는 55.3으로 24.6% 하락하였고 1929~33년중 도매물가지수는 30.9% 하락하였다.

다. Keynes의 巨視經濟學 革命

Keynes는 대공황을 겪어면서 경제를 완전히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에는 때로는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때로는 과도하게 비관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고용과 물가가 불안정해 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간파하고 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고용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을 출간해 거시경제학을 탄생시키는 케인즈혁명(Keynes's Revolution)이라는 경제학의 혁명을 이루었다. 그 후 경제학은 완전고용이 가정된 상황에서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는 微視經濟學과 거시경제의 안정을 다루는 巨視經濟學으로 대별되었다.

케인즈와 관련해 두 가지 오해가 있다. 1933년 시행된 뉴딜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을 케인즈학파의 주장이라는 점이다. 1933년 뉴딜정책은 이미 케인즈의 『일반이론』(1936)이 나오기 전에 시행되고 있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 출간(1936) 전에 미국을 여행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적은 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은 서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철저히 고용안정을 위한 화폐와 이자에 관한 이론이다. 재정에 관해서는 한 장은 물론 한 절도 할애하고 있지 않다.

II. Keynes의 貨幣理論 및 投資 資本理論에 대하여

Keynes야 말로 경제분석에서 시간과 그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중시했다. 화폐이론에서는 화폐의 기능 중 가치저장의 기능을 강조한 것은 경제이론에서 시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미래에 이자소득이 생기는 금융자산을 보유할 것인가, 이자소득이 없는 현재의 현금을 보유할 것인가가 현재의 유동성을 얼마나 선호하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유동성선호설을 주장하고 따라서 이자는 현재의 화폐공급과 유동성선호가 결정하고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가 소득을 결정하고 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 저축이라고 주장해 투자와 저축의 균형에 의해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고전학파의 주장을 연장한 대부자금설은 이자율과 저축 투자 간의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투자과 자본이론에서는 기업가의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결정될 기대수익률과 자본재의 현재가격에 의해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자본재는 여러 형태의 자본재가 존재하므로 여러 가지 자본의 한계수익률 곡선의 총합이 투자수요곡선을 이루고 그 투자수요곡선과 시장이자율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투자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The General Theory* pp. 136-137).

한편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기업가의 투자결정은 수확적인 계산보다는 미래에 대한 “동물적 근성 (animal spirits)” 즉 기업가가 얼마나 미래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느냐의 기업가정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해(*The General Theory* p. 161) 투자이론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케인즈의 자본이론은 단일 자본재를 가정한 총생산함수에서 한계자본생산성을 도출하고 그것이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라고 주장한 신고전학파의 자본이론은 잘 못되었다고 주장해 1960년대 유명한 資本論爭을 불러일으켰다. 자본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자본의 가격을 미리 알아야 자본재의 총체적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신고전학파에서는 미리 자본재의 총체적 가치에서 한계자본생산성을 도출해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을 도출하고 있으며

로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III. 자유시장경제의 스펙트럼에 대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또는 자유시장경제의 스펙트럼을 경제사상사면에서 볼 때 최소한 제도학파까지 포함해 넓게 보는 것이 보다 현실포용적이고 바람직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혼합자본주의 사회시장경제	공산주의 계획경제
정치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혼합자본주의	공산주의
경제의사결정기구	시장경제	시장경제	사회시장경제	계획경제
시장 ↔ 정부	큰 시장	중시장 중정부	중시장 중정부	큰 정부
자유 ↔ 평등	자유	중자유 중평등	중자유 중평등	평등

<자본주의 스펙트럼>

<경제학파와 자본주의 스펙트럼> 우 <—> 좌

자유방임 주의자, 고전학파	오스트리 아학파	합리적 기대학파	화폐론자	신고전 학파	케인즈 학파	신고전 학파 종합	제도학파	질서자 유주의	사회시장 주의자	맑스 주의자
Smith Ricardo	Hayek	Lucas	Friedman	Marshall	Keynes	Samuelson	Coase Williamson	Eucken		Marx
	중앙은행 무용론	정책무력 성 가설	준칙통화 정책		통화 정책	통화 재정 정책	제도	질서제 도자유	사회 시장 조화	생산수단 공유
완전고용 가정	완전고용 가정	완전고용 가정	완전고용 가정	완전고 용가정	불완전 고용	불완전고 용: 단기	불완전고 용	불완전 고용	불완전고 용	
자본주의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사회시장경제		공산주의 계획경제